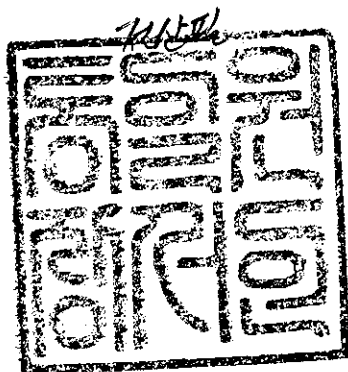


北韓의 協商戰術

- 南北對話 20年史를 중심으로 -

梁 榮 植 (統一研修院 教授·政博)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目 次

1. 머리말	5
2. 南北對話와 북한의 戰略的 立場	10
3. 北韓의 對話 · 協商戰術의 特徵 分析	24
가. 南北對話 運營面	26
나. 南北對話 內容面	58
다. 南北對話 姿勢面	105
4. 맺음말	127

1. 머리말

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 쌍방의 적십자파견원 접촉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이제 2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회고컨대, 남북대화 20년사는 문자 그대로 迂餘曲折의 과정이었다. 기대와 실망, 긍정과 부정의 명암이 교차되는 가운데 그 명맥을 이어 왔다. 서로 「열매맺는 대화」·「민족적 차원의 대화」¹⁾를 표방하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나 지리한 논쟁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통일대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자고 굳게 약속을 하면서도 한쪽이 꽃가지를 꺾어버리는 表裏不同한 경우도 여러차례 있었다. 이는 마치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실천이 수반되지 못한 합의이기 때문에 또는 계산된 전술적 입장에

1) 남북대화 20年史를 살펴보면, 우리측은 「민족적 양심에 입각한 생산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측의 선전차원·정치공작차원의 대화자세를 「비생산적인 대화」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해 왔으며, 한편 북한측은 우리측이 종래에 견지해 온 기능주의적·단계적론 통일대화의 접근방식을 통일을 지연시키며 분열책동에 매달리는 「반통일대화」·「가짜대화」·「빈말공부」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왔음을 感知케 된다.

서 동의한 일과성 조치라는 이유 때문에,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일천만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을 위한 적십자회담 의제 5개항」의 합의라든지 「남북직통전화의 가설운영」, 「수재물자인도인수」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의 실현이라는 결실자체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일각에서는 成果없는 지리한 남북대화의 진행과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을 빗대어 「재떨이 회담」이라고까지 힐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탁구공처럼 오가는 주장이 어지러울뿐」²⁾이라는 실망의 반응도 있었다. 기실 대화란 이야기의 雙方通行인데,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경청하기 보다는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앞세움으로써 결국 一方通行의 독백으로 끝나버린 사례들이 있었다. 더욱이 북한측은 비합리적인 구실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대화를 파탄시키고 대화중단의 책임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수법을 거의 상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망과 분노를 자아낸 사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종의 不妊症 내지

2) ① 金芝河, “재떨이 회담”, (시집 「검은산 하얀 방 너머」(1986년도 출간) 「한국일보」(1987년 8월 30일자)

② 「한겨레신문」 (1990년 3월 10일자 사설)

流産증세에 대한 환멸은 때로는 우리사회일각에 대공협상 불가론에로의 回歸現象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편으로는 남북대화진행과정에 있어서 迂餘曲折에 一喜一悲하기 보다는 洞察力과 인내력을 가다듬어 장기적 시각의 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측의 대화전술과 자세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持久戰的 대화전략 전개와 필요성과, 또 남북대화의 險路에 대한 국민적 이해라는 共感帶가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은 그속에 우리 자신이 항상 민족의 양심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 반듯하게 가다듬는 자세를 견지한다는 대전제와, 또한 무엇보다도 북한측이 시대상황의 변화추이와 민족적차원의 남북관계개선의 道程에 필경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신중한 樂觀論이 내재되어 있다.

남북대화는 속명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강요되고 있는 통일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또다시 민족 내부의 혈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제는 남과 북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민족사적 명령인 것이다. 「평화적통일」을 전제로 하는 한, 싫든 좋든, 남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분명 남북대화는 필요아닌 당위의 명제로

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남북대화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상황과 시대는 변화한다”는 自然法 思想과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天賦的 資産인 대화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도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족친화력을 소생시키고 상대방의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급성에서 탈피하여 인내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 안목의 통일구도를 설정하여 보다 넓은 포용성, 신축성 및 성실성을 발휘해 나감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渾身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환연하면, 피를 보고 만 형제간의 화해를 단숨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마치 처마끝의 물방울이 계속 한곳으로 떨어져 마침내 돌바닥에 구멍을 내고 말듯이 끈심의 화합노력을 계속 쏟아야 한다는 말이다.

남북대화 20년사는 비록 큰 열매를 맺거나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낙관론과 비관론이 얽힌 가운데 변화의 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不可觸·不可視·不可能의 문제였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可觸·可視·可能的의 영역으로 인입될 수 있는 개연성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구라파와 東獨의 민주화 개혁과 개방의 「도미노 현상」은 그 강도와 형태가 차이가 있을 것이나 결국은 한반도의 북녘에 까지 파급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는 장기적차원에서 볼때 필연적으로 장차 남북대화의 전도에 순기능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협상전략노선에 어떤 큰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리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건이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장차 올 변화에 대비하면서 기존의 북한의 협상전략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대화를 계속 주도함으로써 변화축진을 시도해 나가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범주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남북대화 20년사에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불세비키적 혁명전략전술의 발상과 대화협상전략의 기본입장이다.

둘째, 실제 남북대화과정에서 투영되고 있는 북한의 대화협상전술의 유형과 특징 및 경계요소이다.

2. 南北對話와 북한의 戰略的 立場

가. 南北對話의 概念 認識

무릇 대화(Dialog)란 독백(Monolog)의 대칭어로서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³⁾을 뜻한다. 즉 대화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 듣고 말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이야기의 쌍방통행을 말한다. 그리고 특히 「상호이해와 조화를 찾는데 허심탄회하게 주고 받는 생각의 교환과 토론」⁴⁾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대화는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 참된 대화, 생산적인 대화라 할 수 있으나, 겉과 속이 다르면 거짓 대화, 비생산적 대화로 지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화의 참 뜻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남북대화는 곧 「남북한 상호간의 意思疏通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6), p.866.

4) Webster's New Twentieth Century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World Publishing Co. Inc., 1983). p.503.

그러나 분단의 현실, 특히 체제와 이념의 차이와 동족상잔으로 인한 민족내부의 심각한 대결과 반목현상을 감안할 때, 남북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이나 회담의 진행이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남북한간에 상호이해·타협·조정 및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교섭 내지 협상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南北接觸, 南北會談, 南北協商, 南北交渉과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협상(Negotiation)이란 「개인과 집단 또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공통적 이해관계를 조정·타협해 나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⁵⁾ 또는 상거래에서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흥정(bargaining)이 아닌 「이해관계가 相衝되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이루는 과정」⁶⁾을 말한다.

이와 같은 대화와 협상의 개념은 적대·반목보다는 타협과 화합을, 그리고 일방주의보다는 상호주의와 타협주의를

5) Fred Charles Iklè, "Negoti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II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4), p.117.

6) Otomar J. Bartos, "Simple Model of Negotia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1, No.4(December 1977), pp.575-576.

지향하는 긍정적 개념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대화란 필경 일방적인 승리도 일방적인 패배도 아닌 공동우승의 대화이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인위적인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상호 장기간의 斷絶狀態를 지속해 온 남북한의 동족 사이에 대화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적인 화합을 도모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트려고 하는 노력이다.

남북대화가 말로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의 當事者가 주체가 되어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터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간의 분단과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남북대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북한은 「대화」라는 단순한 비정치적 어휘해석에서부터 이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마주 대하여

7) 任台淳, “南北對話와 북한의 協商戰術”, 統一硏修院, 「民主統一論 ~ 統一問題」, (서울: 농원문화사, 1988). pp.176-177.

이야기 하는 것」이라는 일차적 정의에 덧붙여, 「대치상태에 있는 쌍방이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⁸⁾으로 정치적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과 관련,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하고 협작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⁹⁾고 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개념을 「남조선혁명」을 위한 「평화적 방도」로서의 合作統一의 기본수단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협상」의 정의에 관해서는, 「회담」과 「회의」의 同義語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법학용어로 규정하여 “국가들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외교적 방법 또는 회담”⁹⁾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을 보면, 남북협상의 정의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 대표와 남조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¹⁰⁾라고 풀이하고 있다.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제12판, (평양 : 종합인쇄공장, 1981), p.755.

9) 위의 책, p.2342.

10)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구월서방 번각발행, 1971), p.117.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명제는 「남조선 혁명」을 전제로 하는 적화통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표방하는 「조국통일」은 양단된 국토와 민족의 재결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지향하며 「조선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한 鬪爭課業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革命이 상위개념이고 統一은 그 하위개념으로서 종속될 뿐이다.

「조국통일」의 과업은 「남조선혁명」과업이 완수되고 「전조선혁명」과업이 실현되는 중간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조선로동당」주도하에 남한의 「聯共政權」과 ‘합작통일’의 절차를 밟는 외형상의 평화적 통일협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지배집단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旗幟下의 통일”¹¹⁾일뿐이다. 결국 북한이 보는 남북대화·남북협상은 「남조선혁명」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합작통일의 수단으로 동원된 혁명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혁명투쟁의 속성을 탈피하지 않는한, 본질적으로 그것은 「적대적 협상(Adversary Negotiation)」¹²⁾, 「적대적 대화」의 영역을 벗어나기

11) 조선로동당,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평양 : 조국통일사, 1969), p.36.

12) 韓培浩, “共產主義者와의 協商”, 東亞日報社 안보통일문제 연구소, 「분단국의 대화-공산주의자와의 협상전략」, (서울 : 동아출판사, 1979). p. 35.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대화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남북한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남북한의 개념인식상의 차이는 민족화합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戰略的 立場

한반도 공산화 또는 「전조선 혁명」의 완수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合作統一의 명분을 표방하면서 남북대화·협상에 임하고 있는 북한은 오늘날까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혁명투쟁의 旗幟를 결코 내린 적이 없다.

黨과 首領과 人民의 이름으로 혁명투쟁의 과업을 내세우며, 통일과 혁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혁명성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統治의 名分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당과 정권은 출발부터 혁명을 위한 前衛組織이며 무기임을 공공연히 표방하였다.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바로 이러한 革命鬪爭—邊倒的 思考로 무장되어 있는 공산집단

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며, 「노동계급과 전체근로대중의 선봉적 부대이며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고…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는 내용이 당규약에 명문화되고 있다.¹³⁾ 또한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다. 통일을 하고 혁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혁명성을 늦출 수 없다”¹⁴⁾고 強辯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또한 북한의 「社會主義憲法」을 보면, 제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

13) 「조선로동당규약」(1980. 10. 13 제6차 대회 改正)의 前文部分, 國土統一院: 「北韓概要」(서울: 국토통일원, 1984). p.345.

14) 「로동신문」(87년 2월 23일자)논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정확한 지침”

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¹⁵⁾

요컨대, 북한은 모든 것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성으로 일관된 사상적 관점에서 「남조선혁명」론과 「조국통일」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혁명성으로 일관된 사상적 관점」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말한다. 혁명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당과 정권의 모든 정책노선, 전략·전술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대의 창조적 맑스·레닌주의이며 위대한 혁명사상」¹⁶⁾으로 粉飾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과업을 제기하고 그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정립할 것은 明若觀火하다. 남북대화·협상은 「조국통일」을 위한 「비평화적 방도」의 한 부분으로서 전술적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남조선혁명」을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의 예속 밑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12.27), 國土統一院: 「北韓概要」, p.361.

16) 「조선분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p.821.

위한 민족해방혁명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¹⁷⁾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革命性의 사상적 관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대화·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관점은 명백하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혁명성으로 일관된 「주체사상」의 관점을 견지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인 「남조선 혁명」노선을 관철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집단의 가치관이나 정세관은 일종의 「혁명적 幻想主義의 發作現象」¹⁸⁾과 「적대적 이분법」¹⁹⁾의 노출현상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주관적 편향성에 길들여져 있다. 그들이 북한 땅을 「사회주의지상낙원」으로, 남한 땅을 「거지가 득실거리는 인간생지옥」으로 서슴치 않고 묘사해 온 사실은 我田引水의이고 낙관적인 정세관과 선전논리를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광신해 버릴 정도로 「남조선혁명」에 執着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케

17)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117~118.

18) 劉英俊: 「北韓支配集團의 南韓觀에 관한 研究」, 國統政 77-1-1122 (서울: 國土統一院, 1977). p.40.

19) 李泰健: 「共產主義戰術의 上昇의 轉換研究」, 「北韓」(1984년 1월호). p.203.

해준다.²⁰⁾

북한은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까지도 서슴치 않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일문제도 주체사상으로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지난 89년 5월 3일 북한은 당기관지 「로동신문」논설에서, 통일이 안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사회내에 아직도 「사대주의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겠다는 높은 각오를 가지는 것이다”²¹⁾라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사회 내부에 특히 일부 대학가에 「주체사상」이 공공연히 급진파좌경 학생조직의 지도이념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른바 「主思派」의 조직적 투쟁활동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정세관을 단순히 「혁명적 환상주의의 발작현상」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동시에 「주체사상」의 관점을 견지한 북한측의 남북대화 전략의 기본 입장을 과소평가함

20) 梁好民：「朝鮮勞動黨의 自主的 平和統一論」, 國土統一院, 「統一論叢」(서울: 大韓公論社, 1971). p.89.

21) 「로동신문」(1989년 5월 3일자)

으로 인하여 북한의 변화를 성급하게 기대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산세계 전역에 휘몰아치고 있는 거센 개혁의 「도미노」風波에도 한사코 거역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철저한 統制社會」²²⁾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突然變異의 政治體制」²³⁾인 동시에 「超스탈린주의적 지배체제」²⁴⁾가 바로 남북대화의 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조선혁명」노선을 견지한다는 것은 「反帝民族解放 反파쇼人民民主主義革命」²⁵⁾을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는 데 모든 투쟁역량을 동원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3대혁명역량강화」라는 전략적 방침을 비롯하여 「反美自主化 反파쇼民主化 鬭爭」이라든지 「反美救國民族大統一戰線 形成」·「통일세력대 반통일세력의 투쟁」 등의 투쟁 구호들

22) 丁世鉉 : “한국이 보는 남북한관계의 理論과 展望”, 「남북한관계 改善戰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주제발표논문 팜프렛〉(Arlington, June 20, 1986). p.1

23) 劉英俊 : 앞의 책, p.5.

24) 梁好民 : 앞의 책, p.91.

25) 「남조선혁명」의 性格, 基本任務, 戰略的 方針등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① 김일성의 인도네시아〈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강의(1965. 4. 14) 및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로동신문」, 1970년 11월 3일자) 참고.

② 사회과학출판사 : 「정치사전」, p.494

은 「남조선혁명」노선의 관철을 위한 결정적 시기 조성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남조선혁명」노선의 관철을 위하여 결정적 시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남한땅에서 미국세력을 몰아내고 국내 反共·反北勢力 즉 「반혁명세력」을 타도함으로써 親北聯共政權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대화 20년사는 「남조선혁명」노선의 관철을 위하여 평화적 方途를 동원한 혁명투쟁사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세력의 존재와 강력한 친미 반공세력의 통치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의 투쟁은 매우 「艱苦한 조건」에서 진행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판단 아래 한쪽으로는 미군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또한쪽으로는 남한의 반공정권과 국민의 반공사상 약화를 겨냥, 가용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合法·半合法·非合法 투쟁을 전개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남북대화 전망은 일단 변화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현재까지 보여 온 북한의 전략적 입장은 「남조선혁명」의 여건조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온 것으로 단정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현재 우리가 남북대화를 인식하는 시각과는 달리, 남한내의 反美風潮와 민주화투쟁의 전개를 보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유리한 혁명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나간 남북대화 20년사를 고찰해 볼 때, 북한이 견지해 온 남북대화의 전략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우선 북한은 북한사회를 가능한 한 폐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정치를 일종의 종교적 神政政治 차원까지 끌어 올려 「불패의 요새」로 지키면서, 남한 내부에서 계급투쟁을 격화시켜 親共產政權을 수립, 「남조선혁명」을 성공시킬수 있는 결정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주체사상」과 「남조선혁명」노선의 관철을 계속 주장하고 고수해 오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목적은 간단하고도 분명하다. 즉 남쪽에서의 계급혁명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통일지향적·평화지향적」인상을 남쪽 주민들에게 강하게 심어 줌으로써 反北姿勢를

26) 李相禹, “南北會談의 展望과 對策”,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전략 개발 기초자료 <향후1년간 남북관계 전망>」, (남북대화사무국, 1989. 8), pp. 11-14참고.

약화시키며 남쪽 지식인·근로대중들 속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평화공세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한 당국자와의 「상층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계급 투쟁을 억제하는 제도를 완화하여 좀 더 자유롭게 혁명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한의 혁명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담만을 하려 할 것이며, 주로 ① 북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담 ② 남한내의 친북조직·단체의 정치적 位相을 높일 수 있는 회담 ③ 남한사회에서의 親北團體의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담 등에 관심과 중요성을 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한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움직임과 反美氣運을 면밀히 관찰하고 상황에 따라 합작과 반미운동 고무를 전제로 한 쌍무적·다무적·개별적 대화라는 세개의 카드를 병행 또는 분리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²⁷⁾

27) 南廷文, “90년대초반 남북관계 전망”, 국토통일원, 앞의 책, p.43.

3. 北韓의 對話 · 協商戰術의 特徵 分析

과거 북한공산주의자들과 여러차례 회담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異口同聲으로 대공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컨대, 남북대화시대가 개막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대 초 한국전쟁기에 휴전회담에 임했던 조이 제독은 대공협상을 전투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戰鬪場은 길고 좁은 초록색 카바를 씌운 卓子이고, 武器는 혀이며 그리고 接戰은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니었으나 韓國休戰會談이라는 特殊作戰 바로 그것이였다”²⁸⁾고 슬회하고 있다.

또한, 70년대와 80년대에 남북대화에 임했던 한국측 대표들은 북한공산집단과의 대화를 「귀머거리와의 대화 · 녹음기와의 대화 · 쪽두각시와의 대화」²⁹⁾였다고 비유할 정도로 답답하고 지리하며 非生産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쓰고 있다.

이와같은 경험사례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공산

28) C·터너 조이 제독, “한국휴전회담장 : 천막속에서의 나의 투쟁, 1952.8.16”, 국토통일원, 「공산측의 협상태도」(국토통일원, 1972.9). p.4.

29) 任台淳, 앞의 책, p.179

주의자들의 협상태도가 「유달리 전투적이고 철두철미하게 불세비키적인 行動綱領을 준수하는 定向」³⁰⁾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 심지어 「협상없이 협상하려는 외교패턴」³¹⁾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북한측의 협상지도이념과 방법은 대화마당을 심리전의 戰場으로 이용하는데 집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확실히 남북대화는 험난하다.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흔하다. 왜 그런 사람들과 꼭 대화를 해야만 하느냐고 힐난하는 사람들의 비분강개를 이해할만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계속이어져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적통일을 지상과제로 받아들이는 한, 남북대화는 필수불가결이며 회피할 수 없는 민족사적 명령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 신뢰조성과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개선 및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라는 남북대화의 주요목표를 감안한다면, 인내와 성실을 가지고 계속 북한측을 대화의 장에서 설득해 나갈지언정 그냥 주저 앉을 수 없는 노릇이다.

30) 韓培浩, 앞의 책, p.36.

31) 李基鐸, 「북한협상요원의 行태분석」,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 理論과 實際」(서울: 嘉南社, 1984), p.103.

이제 우리가 남북대화를 계속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측의 협상전략과 전술을 면밀히 꿰뚫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지혜와 노력을 결집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 20년사에 점철되고 있는 북한의 협상전술 양태를 事例別·類型別로 분석한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경험담을 종합해 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範疇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남북대화 運營의 측면이다.

둘째, 남북대화 內容의 측면이다.

셋째, 남북대화 姿勢의 측면이다.

위의 세가지 범주를 놓고, 主要特徵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南北對話 運營面

(1) 南北對話 運營體系의 一元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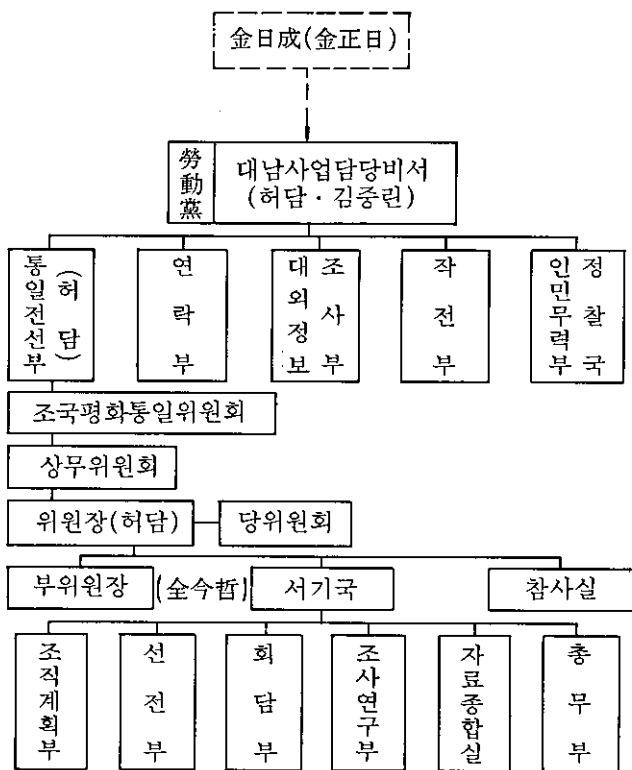
북한이 남북대화 업무를 어느 특정기구에 전담토록 명시적으로 공표하거나 또는 회담운영체계를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對西方 協商過程에서 보여 온

공통적 특징과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회담은 영체제는 일원화되고 있음을 쉽게 간파하게 된다. 당이 모든 정책노선과 방침을 결정한다는 공산국가의 특징과 이른바 김일성「주체사상」에 의하여 노동당이 모든 정책과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일성을 정점으로한 당조직이 혁명 투쟁의 일환으로 남북대화 방침을 결정하고 그 前衛組織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민족사업」·「통일사업」·「대남사업」,「북남대화· 회담· 협상」등의 어휘들은 모두가 다 당이 제기한 혁명투쟁과업의 대명사들이며, 이를 위한 투쟁방침으로부터 세부 전술적 행동에 이르기 까지 철저하게 黨의 指導와 統制·調整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남북대화의 경우, 모든 회담의 전략전술적 방침결정, 대표단 선정 및 진행과정 전부를 黨組織이 직접 管掌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비록 적십자회담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의 핵심인물들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孫成弼부터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서 당의 인물인 것이다. 또 당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순수 적십자인의 입장에서 赤十字人道主義

精神에 따라 우리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대남 통일문제담당기구와 인물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전적으로 당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³²⁾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남전략의 총괄은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적 책임은 김정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대남관계업무부서는 통일전선부·연락부 등의 부서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외곽전위단체로 나뉜다. 남북대화의 전문분야 업무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祖平統」)³³⁾는 가장 중요한 對南工作의 前衛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 노동당의 대남사업담당비서는 허담과 김중린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른바 대남사업은 크게 보아 남북대화라는 공개적 방식과 간첩침투 또는 지하당 공작·국내외 친북세력 구축등 비밀공작 방식으로 나뉜다. 당의 유관조직은 이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며 구체적 전술의 개발·수행, 관리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2) 「朝鮮日報」(1989년 10월 8일자). 집선은 필자가 한 것으로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은 김정일을 거쳐 김일성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金父子가 최종적으로 결정함을 뜻하며 이는父子世襲체제의 단면이 그대로 남북대화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33) ① “남북대화 기구의 성격과 기능”중 특히 「祖平統」부분 참고. 「내외통신」(1989년 3월 3일자).

② “북의 대남정책 기구·인물” 「한국일보」(1989년 10월 30일자)

현재 許鎔은 공개적 방식의 대남사업을, 김종린은 지하당 공작 및 테러 등의 비공개적 공작사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許鎔이 부장을 겸하고 있으며, 연락부장은 「남로당」계열의 鄭敬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노동당 및 북한당국의 남북문제·통일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전위적 외곽단체로 기능하고 있다.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김일성의 발기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그 전해에 남한의 「4·19 학생혁명」이 발생하였고 같은해 8·15경축연설(8.14연설)을 통한 김일성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제의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그 창설의 배경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쉽게 간파할 수 있다.

「祖平統」은 모두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23~25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월례회의를 가져 운영문제를 토의한다.

현재 위원장은 허담이며, 부위원장은 楊亨燮(최고인민회의 의장), 金永南(政務院 부총리겸 외교부장), 金今哲(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등 10명으로 되어 있다.(월북한 崔德新도 사망하기 전까지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祖平統」의 조직구성이 북한의 주장처럼 정당 및 사회단

체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祖國戰線」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어디까지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문공작기구로서 그 임무와 역할의 비중이 매우 크다. 「조평통」은 70년대 초부터 남북대화의 실질적 기구로서 부상되기 시작하였으며 허담이 「위원장」직을 맡고부터 더욱 그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허담은 政務院 外交部長을 거친 외교관 출신으로서 섬세하고 날카로운 성격의 소유자이며 전문가적인 특성을 지닌 비교적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인물로서 지난 84년을 전후하여 대남업무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서열 10위로서 김정일 다음가는 대남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가 김일성의 고종사촌동생 金貞淑의 남편이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그는 과거의 대남사업책임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나타내며 대화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즉 허담은 지난 89년 6월 金泳三 前민주당 총재의 소련방문 때 김총재와 대좌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방문을 초청하였고 文益煥목사의 밀입북시에는 그와 면담한 후 문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허담은 내외 신보도를 통해 說往說來되었던 남북한 고위급비밀접촉설의

북한측 장본인이며 남북한의 非公式對話通路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³⁴⁾

또 한사람의 대화관련 인물은 1989년도에 「조평통」의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金今哲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제1기 남북대화시대인 1970년대 초부터 남북대화 전면에 나타난 자로서 협상논리와 회담경험을 골고루 체득한 북한의 손꼽히는 회담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허담·전금철組가 사실상 남북대화전략수립과 전개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또한사람의 대남담당비서인 金仲麟은 허담과 비교하여 평할때 대남 강경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75년의 남침용 땅굴 사건과 1984년 아웅산묘소암살폭발테러 사건 등 대남공작의 실패로 두차례나 정치위원직에서 밀려났으나 최근 다시 대남공작 담당비서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허담과 김중린이라는 비교적 상반된 성향의 두 인물이 대남사업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북한의 대남전략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34) 북한은 지난 1989. 2. 8. 「祖平統대변인성명」을 발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막후접촉과 관련한 내외신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도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북한측의 남북대화 運營體系는 金日成 → 金正日 → 黨 → 「祖平統」 → 「會談代表團」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下向式 命令系統으로 특징지워지며 핵심계층의 협상요원을 선발, 회담전술을 익혀 남북회담장에 내 보내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⁵⁾

김일성은 남북대화에 관한 한 대체로 사소한 사항들에 대해서까지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아 왔다고 한다. 김정일은 1974년 그의 권력세습작업을 내적으로 본격화하면서부터 남북대화에 관여해왔고 1976년부터는 직접 총지휘를 하면서 이를 김일성에게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CCTV, VTR까지 동원하여 회담현장을 중앙에서 직접 지켜보며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⁶⁾

오늘의 남북대화에서 대화의 마당에 나온 현장의 대표들에게 틀에 박힌 발언문을 낭독하는 이상의 어떤 재량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인 것이다.

35) 북한의 對南政策決定구조와 過程에 관해서는 다음을 參考할 것.

文大瓏, “南北韓統一對話政策의 理論的 接近—政策學的 接近을 위한 試論”, 국토통일원, 「民族統一의 摸索」(국통기89-12-109) (서라벌인쇄, 1989). pp.39-45.

36) 任台淳, 앞의 책, pp.179-180.

(2)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정치협상회의 방식의 會談 겨냥

북한이 전개해온 남북대화전략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양상은 북한의 전통적인 政治·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 選好態度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대화방식도 쌍무적·다무적 접촉·회담 즉 「일종의 통일전선전술적 방식의 대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⁷⁾

남북대화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72년의 「7·4공동성명」으로 대변되는 제1기 남북대화시대를 거쳐 1984년 9월 북한이 제공하기로 제의한 수재물자에 대한 우리의 접수가 계기가 되어 제2기 남북대화시대를 맞으면서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다방면적인 대화창구가 마련되었다.

그후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수년간 대화단절기를 기록하였다.

제3기 남북대화시대는 1988년의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남북대화전개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37) “최근북한의 대화전략 특징”, 『내외통신』, 자료관 제636호(1989년 4월 21일자).

점은 우리측의 전통적인 대화방식인 機能主義的 접근태도를 분단고착화를 노린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배격하고, 정치·군사적 문제의 일괄타결주의를 고수하면서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더욱 확고히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當局者間 會談보다는 집단이나 개인간의 연대에 의한 일종의 雙務的·多務的 協商方式의 대화를 통해 정치·군사적문제의 선결과 남한내부의 혁명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대화전략상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 양상이다.

북한은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각 정당·사회단체·각계계층, 그리고 개별 인사들간에 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각종 대화나 회의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측이 당국논리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견지해 왔고, 대화의 주체와 형태면에서도 당국논리를 고수해 왔다 면, 북한측은 최초의 남북대화제의(1948.3.25)에서부터 김일성의 1990년 신년사에 이르기까지 「政治協商會議」, 「諸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 등 群衆集會式 對話方式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統一戰線차원의 「연석회의」방식의 대화전략구상은 1948년 3월 25일 북한의 노동당 및 8개단체가 제의한 「全朝鮮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제의로 부터 1990년 1월 1일 金日

成 新年辭의 「남북최고위급 당국 및 정당수뇌 협상회의」와 「민족통일협상회의」제의에 이르기 까지 북한측이 집요하게 주장·시도해 온 회담방식이다.

북한측은 50년대와 4·19직후는 「연석회의」, 60년대와 70년대 초에는 「정치협상」, 70년대 중반이후에는 「대민족회의」와 「전민족대회」그리고 80년대에 들어 와서는 「정치협상」과 「연석회의」의 명칭으로 집요하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그 개념을 정리·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 북한측의 定義: 「連席會議」는 “여러단체나 정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관심사로 되는 어떠한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이다(「현대조선말사전」(상), p.807). 「政治協商」은 “대립되는 쌍방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나 상정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토의하고 협상하는 것”이다(「현대조선말사전」(하), p.1794). 「大民族會議」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기구와 회의”로서 大民族會議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38) 丁世鉉, “북한의 連席會議形態 대화제외에 대한 對應方案 연구”, 국제문제 조사연구소, 「政策研究」, 통권97호 (1989. 4월호), pp.117-118.

기구와 회의”라고 규정해 놓고 다시 “대민족회의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북과 남의 당국자들의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 각정당·사회단체대표들 그리고 개별적 인사들과도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기구이다.”(「현대조선말사전」(상), p.741) 그리고 「大民族會議」와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는 「全民族大會」는 「대민족회의」보다는 규모가 크고 群衆性이 큰 모임으로 이해된다.

「大民族會議」나 「全民族大會」는 “당국자들의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광범히”열리는 회의 또는 집회라는 점에서 방대한 인원이 참가하지만 정부당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규모면에서는 「全民族大會」가 가장 크고 「大民族會議」, 「連席會議」순으로 규모가 적어지면서 「政治協商」은 가장 적은 수의 참가자로도 열 수 있는 회의로 보아도 될 것이다.

대체로 북한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혁명의 「干潮期」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국간 대화에 응해왔고, 「滿潮期」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중집회성 대화방식인 「連席會議」형태를 제의,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연석회의」형태의 하나이지만 정부 당국자가 포함되는 「정치협상」은 대체로 「干潮期」를 「滿潮期」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제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협상」을 제의할 때는 正式 國號와 當局代表의 正式 직함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비정부 차원의 접촉과 대화를 즉각 병행·활성화하자는 제의도 빠트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4.19 직후와 10.26 직후가 그러했다.

남한내에 일시적 힘의 공백상태가 나타났을 때는 거의 조건이 없는 「정치협상」을 제의하다가 힘의 방향이 결정되고 對北戰列이 정비되면, 북한은 남한당국이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붙여 「정치협상」을 제의함으로써 「정치협상」거부의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시키면서 정부를 제외한 「連席會議」로 옮겨갈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협상」제의는 「간조기」에서 「만조기」에로의 「轉換期」戰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요컨대, 북한측은 남북대화·협상을 多務的·雙務的接觸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협상대상의 확대」⁴⁰⁾를 통하여 한국내 合法·半合法·非合法的인 容共組織이 남북정치협상과정에서 남한측의 협상대표에 끼어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9) 위와 같은 책, pp.150-151

40) 柳錫烈, “북한의 協商基本戰術”, 「北韓政策論」, (서울: 법문사, 1988), p.391.

제3기 남북대화시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북한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1990년 1월 1일 金日成 新年辭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⁴¹⁾

南北最高位級(頂上)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首腦들의 협상회의 제의는 지난해 金日成新年辭에서 제의한 남북 정치협상회의와 비교할 때, 형식면에서 최고위급을 상위에 올려 남북정상회담을 受容한 듯한 인상을 주는 한편, 在野人士를 제외시킴으로써 정당대표들의 呼應名分을 제공하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통일을 위한 救國對策」으로 軍事分界線 남쪽에 쌓아놓은 콘크리트 장벽의 제거, 각계각층 인민들의 自由往來실현 및 ‘정치·경제·문화 등 남북사회의 全面開放’을 주장하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南北最高位級(頂上)이 참가하는 當局과 各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를 제의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측의 북한사회 개방추구와 소련·東歐諸國의 改革·開放의 波及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41)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최근북한정세동향 보고”-김일성 신년사를 중심으로”(업무참고자료), (1990. 1), pp.10-12.

분석된다.

북한측이 「콘크리트장벽」제거를 전제조건화 한 것은 自由往來 및 開放이 실현되지 못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대남 및 통일·대화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대결의 이중구조를 견지하면서 실질적인 대화보다는 선전차원에서의 대화공세와 함께 下層統一戰線 構築을 위한 勞·學 連帶강화 및 반미·반정부투쟁을 적극 선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3) 二律背反的 兩面戰術의 驅使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 말은 널리 알려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의 鐵則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대화협상운영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이 철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남한당국을 「혁명의 타도대상」이며, 「反統一 팃쇼세력」으로 몰아 부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공식 국호와 정부 당국과 국회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남북한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접촉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응하고 있다.

또한 공개회담석상에서는 不可妥協·不可讓步의 문제인 양 強硬一邊倒·非妥協一邊倒의 입장을 고수하다가도 비공개·비밀접촉에 응하여서는 비교적 실질적인 대화협상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줄곧 「정치·군사문제 선결론」을 주장하면서도 제2기 남북대화시대에는 남북적십자회담에 다시 응하여 역사적인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최초의 이산가족 장본인들의 고향방문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적십자회담 의제 5개항」등 주요합의를 산출했음에도 북한측은 막상 실천단계에 이르러서는 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약속을 파기하는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북한측이 먼저 단일팀구성을 협의하자고 회담을 제의하여 성립한 남북체육회담의 경우, 여러차례 접촉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해 버리는 부당한 경우를 여러차례 우리는 보아왔다.

이와 같이, 북한측은 남북회담의 운영에 있어서 伸縮性과 教條性, 肯定과 否定, 約束과 破棄의 兩極을 오고 가는 二律背反的 兩面戰術을 구사하고 있다. 어제는 흑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서슴치 않고 백이라고 말하며, 어제의 합의사항을

오늘에 와서는 자의로 파기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같은 북한측의 이중적 대화운영전술이 계속 시도되는 한, 사실상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남북대화의 운영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북한측이 보여 온 이중적 회담운영방식은 겉과 속이 다른 僞裝·欺瞞戰術이요 聲東擊西式 協商戰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회담의 경우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소산이라기 보다는 대화운영과정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계산된 전술구사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상호 모순되는 이중전술을 공공연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저의는 대체로 다음 몇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측이 구사하는 이중전술적 형태는 공산주의 특유의 革命主義的 價値觀과 情勢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二分法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상대로서의 남한은 反革命·反統一勢力이며 타도대상일 뿐이다. 적을 약화·전복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면 모두가 다 「正義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합리화시킬 뿐이다. 남북대화의 전략적 목표가 반혁명세력의 약화·타도에 있는 한, 이 목표에

도움이 되는 전술방식은 필요에 따라 欺瞞이든 압력이든, 폭력이든 모두다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毛澤東式 邊打邊談 戰術과 같은 수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정세를 판단하거나, 또는 객관적 정세가 대화압력의 가중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대화·협상을 시도해 왔다. 예컨대, 1970년대 초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고위당국자비밀접촉 및 남북조절위원회회의, 그리고 1980년대초 「10·26사태」 직후의 남북총리회담제의와 1980년대 후반 「6·10민주항쟁」·「6.29민주화 선언」을 전후한 남북정치협상회의제의, 그리고 1980년대말 현재 진행되어 오다가 다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구실로 대화중단선언을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당국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4邊會談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둘째, 자타가 공인하는 바, 명분이 큰 평화지향적·통일지향적 이미지를 投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북한측이 과감히 남북대화에 응한다는 점이다. 내심으로는 결코 완전합의나 실행을 하지 않고 지연전술을 구사하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회담의 기선을 장악, 선제제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중전술을 구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올림픽경기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북한측은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 회담을 선제 제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분명 단일팀 구성을 회담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 1964년 東京올림픽 단일팀구성참가를 위한 IOC중재하의 로잔느 회담과 홍콩회담, 1984년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단일팀구성을 위한 판문점 회담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북한참가를 위한 IOC중재하의 로잔느회담 등 일련의 남북체육회담⁴¹⁾의 경과를 분석해 보면, 북한측은 單一팀 構成이나 共同開催에 뜻을 두기 보다는 별개팀의 참가, 또는 북한팀의 불참명분 확보 또는 한국측의 참가나 개최를 저지하거나 방해공작을 전개하는데 일차적으로 전략적 목표를 두었음이 명백하다.

1979년의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⁴²⁾의 경우에도 북한측은 한국팀의 평양대회 참가를

41) ①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南北韓統一對話 提議|比較(1945-1986)(1986)」, pp.69-76.

②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제35호)(서울: 동아인쇄공업, 1984.8). pp.27-62.

③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대한올림픽위원회, 「로잔느 남북체육회담白書」(서울: 천인인쇄사, 1989). 특히 제4장(회담이 남긴 教訓)참고. pp.344-380.

42) “남북한탁구협회회의”, 국토통일원, 「南北對話白書」(서울: 전광산업사, 1988), pp.305-326참고.

봉쇄할 목적으로 회담을 제의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셋째, 북한측은 혁명정세 조성에 유리한 회담은 과감히 受容하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逆機能的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지연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측이 정하는 시기에 특정의 구실을 내세워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연기시킨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예컨대 「10.26사태」이후의 南韓政局의 混亂과 정부당국의 困境狀況을 놓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식국호를 사용하는 가운데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른바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를 제의하고 남한측의 대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이들에게 편지공세 등을 통해 파상적인 평화공세를 전개, 남한정국의 불안을 加重시키려고 획책했다. 그러나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국내정국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북한측은 11차 실무접촉을 이틀 앞둔 1980. 9.24 방송을 통해 「국무총리서리」의 자격시비 등을 구실로 삼아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말았다.⁴³⁾

넷째, 북한측은 공개회담과 비공개 회담을 병행하되, 공개

43) “남북한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국토통일원, 앞의책, pp.136-151 참고.

회담에서 보다는 비공개·비밀접촉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점이다. 북한측은 공개회담의 경우, 결코 우리측의 논리와 주장에 동조하여 원칙적 입장이나 주요사항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 우리측이 주요사항을 양보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당연한 것으로 既定事實化하는 일방, 북측 입장의 정당성을 선전하는데 주력한다. 문자 그대로 주고받는 식의 실질적인 협상은 공개회담보다는 비공개 접촉에서 이루어진 사례들이 남북대화 20년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공동성명의 합의 발표라든지, 1985년의 제1차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교환방문 합의·실현 사례 등을 지적할 수 있다.⁴⁴⁾

물론, 이 경우에도 남북한의 합의와 실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전략적 방침의 불변, 합의사항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실천태도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또한 우리측 주장에 대한 북한측의 호응가능성의 기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보다 큰 양보를 요구하려는 전술적 태도를 보이는 교활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갈 사항은 非公開幕後接觸의 필요성이다.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비밀접촉을 비롯하여 제6

44) 앞의 책, pp.56-62 및 pp.203-263 참고.

共和國政府의 「비공식대화 통로」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비공식접촉의 통로가 斷續적으로 이어져 옴으로써 상호 意思疏通과 실질적인 協商을 추진하여 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⁴⁵⁾

(4) 宣傳·煽動의 效果 極大化

북한은 남북대화를 對內外 및 對南 心理戰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수행을 위한 免許狀」⁴⁶⁾으로서 뿐만아니라 「宣傳煽動의 好材」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선전선동에 관한 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악천후에도 표적을 향해 발진하는 全天候戰鬥機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남북대화에 관련된 북한의 心理戰術은 時空을 초월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회담이 중단되어도 책임전가와 再協商제의준비를 위한 심리전은 계속된다. 또 때로는 회담 대표나 특정계층·집단 또는 각계각층의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때로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또는 제3국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을 가열화한다.

45) 남북한간의 비공식 대화통로의 유지문제는 별도의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서 본 주제밖의 과제이므로 詳論을 유보한다.

46)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대화백서」(서울: 대한공론사, 1978), p.175.

회담대표의 基調發言⁴⁷⁾이나 記者會見, 聲明발표를 비롯하여 신문·방송매체의 동원 및 선전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선전을 계속 반복한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부정하거나 針小棒大함으로써 심리전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은 회담의 성과 보다도 회담으로부터 나타나는 심리전 차원의 附隨效果 개발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적의 약점과 모순을 확대시키고 적을 고립화시킬 수 있는 통일전선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또 외부로부터의 대화압력과 종용에 대한 전술적 對應과 더불어 평화이미지 投射를 위하여, 그리고 대내정치목적의 상징조작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정치심리전의 도구로 轉落시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심리전 부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이용해 온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대화상대인 남한정부당국의 正統性이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발언과 논리는 회피하고 대신 공공연

47) 각종남북회담에서 행해진 북한측 수석대표의 기초발언문은 통상 그 구성 자체가 바로 선전물이라 할 정도로 북한체제의 선전·선동논리를 함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측 입장에 대한 我田引水の 否定·歪曲·非難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게 남한당국을 「分裂主義 팻쇼집단」으로 中傷謀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은 반민족·반민주·반통일세력으로, 북은 자주·민주·통일세력으로 二分化시켜 선전하는 이른바 모략심리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회담의 경우에도 북한측의 主導的 發起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선전하며,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측의 正當한 주장에 남한측이 호응 또는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부각시킨다. 또 회담이 진전이 없고 결렬될 경우에는 필연코 남한측이 대화의 前途에 걸림돌을 놓고 대화를 파탄시키려 한다고 강변하기 일쑤이다. 대화재개시에도 일단 대화중단책임을 남한측에 전가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전쟁일보직전의 대결상태」와 한·미양측의 「대결노선과 분열주의노선」을 규탄한 연후에 구국적 차원에서 대화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主·客觀的 정세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남조선당국」,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하면서도 상이한 「체제의 존재」인정이라는 표현은 쓸지언정, 결코 한반도상의 두개의 합법적 국가를 인정하는 공식 발언을 한 예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도 한쪽으로는 방송·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우리정부를 겨냥, 「팻쇼세력·남조선괴뢰도당」

으로 계속 중상비방을 해왔으며, 대화중단의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공식 발표를 통해 회담대표와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제1기 남북대화 시대의 경우, 그 응변적인 예를 우리는 이른바 평양측의 「8.28 대화중단선언」⁴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측은 한국의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2개조선노선의 공개적 선포」라고 단정하고 남한측이 “남북대화의 간판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분열을 고정화하여 2개조선을 조작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일방, 이른바 「金大中납치사건」을 빌미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李厚洛을 비롯한 남조선 중앙정보부 강패들과는 마주 앉아 國家大事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을 「강패」로 매도했던 것이다. 또한 「채포·투옥된 모든애국자들을 석방하고, 남북조절위원회는 응당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북조선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계각층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2년 5월 평양에서 李부장이 김일성을 처음 만났을 때 中央情報部長이라는

48)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성명”(1973.8.28), 南北調節委員會, 「南北對話白書」, pp.136-139.

사실과 「中情」의 주입무가 「공산주의자들을 단속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대해 김일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직접 평양에 왔기 때문에 당신을 신임한다”⁴⁹⁾고 말한 사실을 감안할 때, 또 남북조절위원회담을 당국자간 회담으로 인정해 온 북한측의 입장과 확대개편론의 주장을 고려할 때, 북한측의 대화중단선언은 단순한 회담대표교체 및 정치협상애로의 확대전술이 아니었다. 이는 남북대화의 계속으로 얻을 것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회담의 무기연기선언일 뿐만 아니라, 남한당국을 「팻쇼통치」·「공작정치」의 典型인양 매도함으로써 필경 「남한당국의 정권안보용 대화공작」에 휘말려 기만당했다는 인상을 부각하기 위해 고안된 高度의 心理戰術의 適用이었다고 할 것이다.

제2기 남북대화 시대에도 1985년 4월 남북한국회회담제의와 관련, 위와 같은 유형의 심리전의 전개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북한측은 한편으로는 국회회담제의 문건을 통해 「대한민국국회」, 「대통령」등의 호칭을 異例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心理戰媒體를 통해 「남조선괴뢰도당」·「팻쇼 絞刑吏」등 계속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49) 앞의 책, p.137.

전에 없이 강화함으로써 겉다르고 속다른 二重戰術을 구사했던 것이다.⁵⁰⁾ 당시 북한의 李鍾玉 부총리는 평양을 방문중인 탄자니아 정부대표단 환영연설(85. 4.11 단장 무니이 부통령)에서 북측 제안내용을 선전하는 가운데, 「美帝와 남조선 괴뢰의 팀 스피리트 '85 군사훈련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획기적인 구국방안」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제외가 북한의 평화 이미지 개선 등을 노린 것이지 한국정부와 국회의 정통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지 아니함을 보여 주었다.

둘째, 북한측은 남북대화과정을 남북한체제의 실상을 확인하는 기회인양 부각시켜 흑색심리전의 부수효과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체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中傷·謀略·歪曲·날조 등의 방법으로 마치 「생지옥」과 같은 곳으로, 반면에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지상낙원」인양 선전해 온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黑白論理式의 정치심리전은 주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내의 일부 극빈층 근로자계층이나 또는 北韓偏向症에 사로잡힌 사실상의 北盲症 感傷主義者들을 부차적 대상으로 겨냥하

50) “국회회담제의 이후 대남모략선전 강화” 「내외통신」(1985년 4월 15일자).

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일례를 들면, 남북경제회담 관련 동향을 들 수 있다.⁵¹⁾

북한은 지난 85년 9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4차 남북경제회담이 실질적인 합의내용 없이 끝나자 이에 대한 책임전가 수법을 재연하는 일방, 한국의 경제실정을 힐뜯는 모략선전을 하고 나섰다. 「평양방송」의 경우, 동년 9월 9일 논평을 통해 제4차 남북경제회담내용 및 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측이 제의한 「무연탄 30만톤 구입과 京義線 鐵道連結 사업의 연내 착수 토의 주장」을 “문제토의에 혼란을 조성하고 걸렁걸렁 시간이나 끌면서 기본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매도하였다. 동시에 이 방송은 남북경제교류의 전망에 언급, 북한은 「인민들이 먹을 걱정, 배울 걱정 등 모든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남북경제교류는 “美帝의 식민 통치 밑에서 生活苦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남한실정의 왜곡선전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가지 예를 더 들어 보자.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1985. 5.28-29, 서울)의 경우,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51) “제4차 남북경제회담동향”, 「내외통신」(1985년 9월 27일자).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 방문단의 규모, 체류일정과 왕래절차 등 구체적인 문제를 실무대표 접촉에서 협의키로 함으로써 밝은 전망을 주고 있었는데, 북한측은 故郷訪問團 교환의 의미 보다는 남한 실정의 왜곡 선전에 주력했다. 北赤대표단 일행이 평양으로 귀환 후 나타난 북한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된 龍仁 「民俗村참관」과 「三星電子 방문인상담」⁵²⁾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斜視眼的 南韓觀과 歪曲宣傳의 실상을 직감케 된다.

민속촌을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문화전통을 전수하고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꾸며 놓은 마을」이라고 운을 댄 후, “봉건농촌과는 달리 그곳에는 큰 규모의 야외유홍장, 오락실, 술놀이 식당 등의 시설물들이 있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 기생관광이 성행하고 있다”느니 「민속촌이란 민족외피로 위장된 봉건관 유홍관광촌」으로 歪曲하고 있다. 더 나가서는 “인민들을 착취 억압하여 무위도식하는 봉건양반들의 퇴폐한 생활을 민족전통성이라고 내세우니 우리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무지몽매로 권력과 외세 앞에 순종하는 그런 무력한

52) “제8차 남북적회담 보도실태”, 「내외통신」(1985년 6월 7일자).

① 「평양방송」(1985년 5월 30일자)

② 「중앙방송」(1985년 5월 30일자)

인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다”는 등의 비방을 늘어 놓았다.

水原의 三星電子 방문 인상담을 보면, 이 회사의 설립자에 대한 비열한 인식공격을 늘어 놓고는 이 회사를 「국제화 청업에 지나지 않는 기형아」라는 식으로 매도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측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소재로 남북대화관련동향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金日成의 우상화와 金父子世襲體制강화를 위한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도 일차적인 목적은 북한주민용이요, 부차적인 목적은 남한내부의 해바라기성 對北偏向主義者를 겨냥한 선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웅변적인 예는 1972년 9월 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 金泰禧北赤側團長의 기자회견내용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한 김태희 단장은 “서울시민을 비롯하여 우리와 만난 모든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수령에 대한 敬慕의 정을 표시하면서 우리들을 한낱 적십자대표로서가 아니라 수령께서 친히 보내주신 통일의 사절로 따듯이 마지하여 주었

다”⁵³⁾고 함으로써 마치 남한주민 전체가 김일성을 흠모하는 양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김일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를 북한주민들에게 학습시키는 가운데 대남관계분야에서 제시되는 남북 통일방안·대화제의 등을 김일성 유일체제의 유지강화 및 이상화와 연계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가지 주목할 점은 제2기 남북대화시대에 들어와서는 金正日의 지도력과 남북대화운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이 남북대화를 직접 지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북측대화요원들은 전례없이 부드러운 태도와 미소작전을 보이는가 하면, 어휘 구사에 있어서도 「통크게」·「재까닥 해결합시다」라는 등의 이른바 「김정일 지도자동지식」의 협상방식을 상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등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북한측은 대외·대남용 僞裝平和攻勢目的으로 남북대화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으로 부터 연유되는 대화압력을 유효적절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평화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화를

53) 남북조절위원회, 앞의 책, p.174.

제의하거나 또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내세워 남한측은 戰爭指向的이고 북한측은 平和指向的인양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국회회담의 경우, 북한은 먼저 국회회담이 「國難타개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방식」으로서 “온 겨레와 더불어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다”고 그들이 先制提議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서 남한측을 반평화세력으로 규탄하고 있다. “전체조선인민과 세계의 광범위한 여론이 우리의 제안에 대한 남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때에 남측에서는 상서롭지 못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평화제안에 심사숙고하여 응해 나올 대신 남침위협을 구실로 우리를 걸고 〈멸공85〉요, 〈박쥐85〉요 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연이어 벌여놓고 대결과 전쟁의식만 고취하고 있다. … 우리가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토의하자고 하는 이때에 우리를 반대하여 칼을 버리며 대화일방을 박멸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닐 수 없다”⁵⁴⁾는 것이다. 이같은 선전은 참으로 賊反荷杖格이요, 엄살에 가까운 왜곡선전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북은 전쟁보다는 평화

54) 「로동신문」(1985년 5월 2일자).

를 애호하며 진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남은 전쟁을 위하여 칼을 갈고 대화상대를 쳐 없애겠다고 한다는 식의 선전을 국제사회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요컨대, 남북대화 운영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북한측은 거의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없이 恣行自在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측은 일원화된 대화·협상체제의 유지, 대내외론으로 부터의 압력요인발생의 원천적 배제를 바탕으로 심리전 차원의 대화전술을 전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南北對話 內容面

(1) 原則論·名分論의 反復 主張

흔히 “공산주의자들은 야누스와 같다”는 비유의 말을 많이 듣는다. 남북대화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 같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 내세우는 명분적 구호나 용어의 선택은 진실인 것처럼 표방하나 그 해석이나 실천 문제에 있어서는 왜곡과 부정으로 點綴되고 있다.

“조국의 통일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외세를 물리치고 당국·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민족회의 또는

전민족대회와 같이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자주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구국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자. 무조건 자유왕래를 실현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당장 끝장내자. 전민족이 힘을 합쳐 합작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反外勢自主化·反팃쇼民主化鬭爭에 앞장서고 있는 남한내부의 민족세력·민주세력·통일세력을 탄압하지 말라.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여 통일을 실현하자. 통일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당장 통일하자. 통일의 전도에 가로 놓인 인위적인 장애와 걸림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등등 통일지향적이고 거창한 구호적 선전을 북한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 20년사를 회고해 볼 때, 솔직히 북한이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남북한현안문제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가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통일대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은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死文化된 상태에 있다. 북한측이 합의한 동기와 통일3대원칙에 대한 一方的이고 我田引水의 해석(※ 용어혼란전술사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도설명을 참고)으로 인하여 진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오늘날 그 합의성명은 휴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대화 20년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열매로 평가되고

있는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교환방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측의 水災物資提供提議를 한국측이 과감히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된 최초의 남북협력의 사례도 필경 북한측의 의도적 회피작전으로 인하여 1회성 心理戰用으로 轉落시키고 말았다. 우리측이 제의한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은 이산가족문제와는 무관한 북한측의 예술공연단교환방문공연요구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인데, 모란봉 경기장 사건 등과 같은 고의성 도발로 인하여 결국 시위용 또는 1회용의 고향방문단 교환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당장 통일해야 한다. 평화공존은 영구분열·분단고정화 방안이다. 통일만 하면 다 풀린다. 남한당국은 수구세력이며 반통일세력이다. 왜 통일을 위하여 외세를 내몰고 북과 합작통일에 나서지 않느냐”는 등의 북한측 주장과 선전은 남북대화 20년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권수립직전 부터 계속 주장해온 터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당장 통일하자고 하면서 통일을 위한 합의사항 실천마저도 외면하는 이율배반성을 보여 왔다.

분단 45년이 되는데도 당장 통일하자고 외쳐온 북한은 과연 진실된 자세로 통일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받을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分斷解消方案과 統一推進方案

에 합의·실천하려는 데 뜻을 두기 보다는 북한체제의 공고화와 「先남조선혁명 後조국통일」노선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경 북한은 남북대화 20년사를 정치공작 또는 정치심리전 차원의 시각에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게 한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은 “...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어떤 원칙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제의와 주장을 신축성있게 명칭변경 등 섬세한 표현수법으로 조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의 原則合意誘導戰術과 명분론의 반복주장은 결국 겉으로는 분명 통일지향성과 일관성을 부각시키는 부수효과를 거두는 한편, 본질문제에 깊게 들어가는 것을 피하면서 시간을 소모시켜버리는 지연전술의 효과도 겨냥하는 것이다. 만약 원칙론과 명분론에 상대방이 동의해 올 경우, 최종 단계에 가서는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여 실행직전에 파탄시켜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남북한체육회담에서 실감하고 있다.⁵⁵⁾

55) 올림픽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를 앞두고 남북한단일팀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체육회담을 북한측이 선제제의를 함으로써 내외의 호의적 관심을 유발하여 회담을 성사시킨 후, 원칙론 합의문제로 시간을 끌고, 구성방안 및 운영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임으로써 마치 남한측이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인양 왜곡선전하다가 급기야는 회담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어는 경우이든 이 회담에서 드러난 것은 북한측이 결코 단일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원칙론·명분론의 반복주장과 선전으로 거시적이고 통일지향적이며 적극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우리측은 구체적 실천방안 위주의 제의와 주장을 함으로써 비교론적 시각에서 미시적이고 평화공존적(이는 북한측의 선전공세로 分裂主義·分斷固着인양 왜곡되어 온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음)이며 소극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회담장의 안팎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측의 주장이나 선전논리를 접할 때에 겉과 속, 말과 행동의 부합여부를 꿰뚫어 봄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한쪽 얼굴만 보고 오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공협상의 경험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두가지 수법으로 진실을 다루는데 그 하나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왜곡시켜 왔다는 것이다.⁵⁶⁾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이란 浮上하는 성질이 있어서 비록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도 당혹한 순간에는 표면으로 불쑥 솟아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知悉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전술을 아주 빈번히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을 歪曲하는 전술을 빈번히

56) “眞實과 歸結”, 국토통일원(편), 「共產側의 協商態度」(1972.9). p.143.

사용한다.

또한 북한측 회담대표들이 원칙론과 명분론을 연계시켜 이른바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반복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持久戰術에 속한다.

비록 강탈적 요구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하여 주장하다 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대방의 요구조건도 받아줘야 할 것이 아니냐? 어찌면 당연한 요구인지 모른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것을 받아 주지 않으면, 또는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생산적인 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식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고려·강구하는 방향으로 촉매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아전인수적 정세판단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기간중 휴전회담에 참가한바 있는 미국측 협상요원의 경험담을 보면,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할 정도로 어리석은 요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협상전술의 집요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⁵⁷⁾

“공산주의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要求條件을 繼續 反復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는 흔히 있는 일이다. 공산

57) “持久戰法”, 국토통일원, 앞의 책, p.189.

주의자들이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없이 되풀이 하는데, 사용하는 발언의 내용들은 화가치밀 정도로 우둔한 내용이다.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전에도 끊임없이 사용해온 똑같은 발언,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들의 하는 행동이란 마치 1달러 짜리 지폐를 가진 한 아이가 이것을 은행에서 동전으로 바꾸고 이 동전을 다시 다른 은행에서 지폐로 바꾼다음 또다른 은행에 가서 다시 동전으로 바꾸는 일을 수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아이는 무슨 이유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되풀이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누군가 한번은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그때 計算錯誤로 생기는 공짜 돈은 내것이 될수 있으니깐요”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韓國休戰會談때에 공산측이 休戰線을 38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공산측 주장의 핵심은 전쟁이 38도선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휴전선도 38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책을 미·일전쟁에도 적용해 본다면 태평양전쟁이 眞珠灣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美國은 眞珠灣으로부터 태평양지역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을 일본에 양보해야만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그들의 주장이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반이라는 기간동안 끝까지 고집하고 되풀이 했던 것이다.

(2) 先決條件論의 반복 주장

남북대화 20년사에 매 회담 마다 빠지지 않고 북한측이

거론한 주장이 이른 바 「先決條件論」이다. 선결조건론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남북회담의 장래가 어둡다는 적신호를 뜻한다. 모든 회담이 교착되거나 연기 또는 중단·파탄되는 경우, 북한측이 선결조건론을 연계시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남북회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 온 典型的手法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내놓고 회담의 진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중국에는 이를 구실로 대화를 중단시킨다.

이같은 전제조건들은 시기적 상황에 따라 주장의 순서나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조건들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⁸⁾

- ① 주한미군의 철수 및 북한·미국간 평화협정 체결
- ②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기존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법체제의 철폐
- ③ 이른바 「民主人士」 또는 「愛國的人士」의 석방과 모든 정당·단체(공산당포함)의 합법화와 정치적 활동의 자유보

58) ①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통일대화」(1982), p.77 (“전제조건「선결조건」문제”)

② 「로동신문」(1980년 10월 10일자).

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실현

④ 현존 대한민국정권을 「民主政權」·「聯共政權」·「人民政權」·「民衆政權」으로 교체

⑤ 대화상대로서 대한민국의 특정인사 排除(또는 特定人士의 일방적 지명)

북한은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경우,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法律的·社會的·條件環境 改善論」을, 남북조절위원회에서는 「군사문제선결론」을 남북대화진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내세워 결국 대화의 진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⁵⁹⁾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회의에서 통일원칙의 하나인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구실을 내세워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아무런 상응조치도 없이, 무조건 ① 반공법·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② 이들 법에 의하여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자들을 석방하며 ③ 대한민국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합법화하도록 반공정책을 포기하고 「聯共政策」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간의 군사력균형문제와 불가침합의문제는 도외시한채, 무조건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와 한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을 저지

59) ① 남북조절위원회, 앞의책, p.172.

③ 任台淳, 앞의 책, p.196.

하는데 목적을 둔 ① 무력증강중지 ② 상호 10만이하 감군 ③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5개항목 군사제안의 수락을 「대화진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이 5개항의 군사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한 “대화의 진전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6.23선언이 「2개의 조선을 고정시키는 民族分裂政策」이라고 強辯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제2기 남북대화시대에 있어서도 북한측은 선결조건론을 계속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1976년 부터 시작된 팀 스피리트 韓·美合同軍事訓練을 빌미로 삼아 해마다 한반도 긴장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거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호재의 구실로 이용해 왔다.

제3기 남북대화시대 특히 1989년에는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등의 잇달은 밀입북사건에 편승, 대화진행의 선결조건으로 이들의 무조건 석방, 국가보안법의 무조건 철폐, 팀 스피리트훈련의 즉각 중지 및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을 통일의 장애요소인양 매도하였다.

89년의 경우, 3월 4일 한국국방부가 팀·스피리트89훈련 일정을 공식발표한 직후 북한의「중앙방송」은 南北高位當局

者會談이 끝난지 24시간도 못돼서 발표되었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는 동족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며 미제침략군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등으로 비난했다.

이와함께 평양방송 및 당기관지 「로동신문」등 북한의 주요 宣傳媒體들은 일제히 팀·스피리트 '89훈련을 규탄하는 논조들을 내보냈다. 한결같이 팀·스피리트훈련을 「북침전쟁준비를 위한 침략전쟁, 핵시험전쟁」이라고 非難함으로써 연례적인 방어목적을 띤 훈련의 성격을 공격훈련인양 왜곡 선전하는데 주력했다.⁶⁰⁾

그러나 한편, 북한측은 3월 9일 단일팀구성을 위한 체육 회담에는 응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

팀·스피리트훈련은 한·미간에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전쟁억제를 위한 방어목적의 군사훈련일뿐 아니라 더욱이 이같은 취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매년 북한측의 참관을 요청하고 사전에 훈련일정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같은 성격의 훈련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상존하는 훈련이고 북한에서도 내부적으로 정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60) “팀·스피리트'89 관련동향~비난선전에 모든 수단 총동원” 「내외통신」
(1989년 3월 10일자)

1988년의 경우 東海上에서 사상최대규모의 북한·소련간 해상합동훈련이 실시된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이를 對韓·美 모략선전의 好材로 이용함과 동시에 대내정치적 차원의 심리전전개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대내적으로는 팀·스피리트훈련에 대응한 대남 선전·선동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긴장된 동원태세분위기를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적개심과 호전성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노력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책임을 한·미측에 전가하고 또 남한에 대해서는 반정부·반미감정을 촉발시켜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보려는데도 그 속셈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책략은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들어 한국내에 남북대화 및 통일열기가 확산되고 문익환목사, 서경원의원, 임수경양 및 문규현신부 등의 밀입북사건 등에 편승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파쇼악법’이니, ‘통일의 장애물’운운의 일방적인 모략선전을 통해 내정간섭적인 대남선동을 강화하고 있

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조치된 것으로서 그동안 논란되어 온 적용상의 문제점을 감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서 검토심의하여 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입법조치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이래라 저래라 內政干涉的이요 강탈적인 요구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북한은 그들 내부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에 대해 刑法65조 등에 최고의 극형조항까지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⁶¹⁾ 남북대화마당에서는 한국내의 국가보안법철폐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賊反荷杖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말하자면 북한측의 6.25전쟁 도발로 인한 민족 살상행위 사과, 북한주민의 기본권박탈에 기초한 「김일성 족벌체제」폐지, 남침땅굴·간첩침투사실 사과 등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선결조건」을 강하게 제시할 입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前提條件의 優先解決만을 고집한다면 남북한 관계는 보다 악화되고 오해와 불신만 심화되어 평화

61) 「내외통신」, 같은 날자.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북한 쌍방이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제조건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통일도,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측이 제1기 남북대화시대에 특히 인도주의정신에 바탕을 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일방적인 정치적 요구로 제기한 이른바 「조건·환경개선론」⁶²⁾도 위에서 분석한 先決條件論의 部類에 속한다.

(3) 軍事問題 先決論의 固守

군사문제선결론은 주한미군철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간이든, 미북한간이든 군사문제해결이란 그 중핵문제가 곧 미군철수로 된다.

남북대화 20년사에 있어서 북한이 군사문제선결론을 회담석상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3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 제2차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행한 朴成哲의 발언은 이른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과 태도」를

62) 「條件·環境(민주화)問題」, 남북대화사무국, 같은 책, pp.79-81 참고.

밝힌 것으로서 3개월후인 6월 23일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회의에서 북한측의 박성철은 “남북간의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신의있는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도 없으며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5개항목의 軍事提案을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토의할 것을 요구했다.⁶³⁾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군사제안은 ① 남북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 두고, ② 남북은 군대를 각기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③ 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고, ④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간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해 서로 「擔保」(保障)하는 평화협정(제2기 남북대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대미평화협정체결주장으로 전환됨)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박성철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 쌍방의 군간부들을 여기에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문제선결론은 북한의 통일방안, 남북대화 현안과제로 계속 강조되어온

63) 南北調節委員會, 「南北對話白書」, pp.111-112.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인 대치 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라는 말로 표방되
고 있는 북한측의 주장은 특히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이른바 「祖國統一 5大綱領」⁶⁴⁾의 제1항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조국통일5대강령」의 제1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副詞句를 삽입하여
군사문제선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제1항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한다.”

그리고 軍事問題先決論의 주장이유와 해결방안에 관해서
는 군사문제해결이야말로 최우선의 관건적·근본적 문제로

64) ①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체스꼬슬로벤스
코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
서 한 연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28」(1973.1-1973.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382-395.

② 김일성,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
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25일), 위와 같은 책, pp.39
6-404 참고.

③ “조국통일5대 강령”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pp.772-773.

규정,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은 현시기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호상 이해와 신임을 두터이하며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밀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이다.”

•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와 불신임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호상 신뢰의 기초위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다.”

북한측의 군사문제선결론에 호응하지 않고 機能主義的 · 段階論的 문제해결입장을 취해 온 남한당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민족적 대단결」 반대세력 또는 「분열 유지 · 고정

화」세력으로 규정, 다음과 같이 매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긴절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문제들이나 이러저러한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로 호상 신임을 두터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이 아니며 ‘민족분렬’의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렬을 유지하며 고정화하자는 것이다.”

• “남조선당국자들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러한 입장을 버리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김일성의 「6.23 5대강령」발표 이후 북한측은 여러가지 형태와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한 軍縮問題에 관한 제의 및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협상의 형태를 보면, 남북간 고위정치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당사자회담, 연석회의, 미·북한 2자회담, 남·북한·미국의 3자회담, 다국적 군축협상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의 무조건 즉각 철수를 비롯하여,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1992년 시한부 철수, 핵무기철거 및 주한미군기지철폐, 남북한 병력의 단계적 축소 및 10만 이하 감군, 핵무기 등 무기반입 중지,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에로의 전환, 美·北韓平和協定締結, 南北不可侵共同宣言,

한반도의 非核平和地帶化,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중립국감시군주둔, 軍事同盟條約 폐기, 팀 스피리트 훈련 및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⁶⁵⁾

북한이 이처럼 정치·군사문제 우선의 일괄적 타결방식을 견지하고 이를 남북대화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군철수와 한국의 국방태세약화를 통해 혁명전략수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이는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사회개방에 따른 體制衝擊 憂慮, 새로운 데탕트시대의 도래와 美·蘇合意 또는 일방적 감군추세에 따른 한반도군사문제에 국제적 관심증대, 그리고 한국내 반미기운증대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휴전 이후 무려 200회 이상의 대남군축제의를 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은 대남군사력의 절대우위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赤化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대남공세를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면 외국군 철수주장 자체가 지니는 정치적 명분과 군축주장이 풍기는

65) 남북한의 軍縮論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 ① 李昊宰(編), 韓半島 軍縮論(서울: 법문사, 1989)
- ② 국토통일원, 「군비통제연구 문헌·자료집」(서울: 휘문인쇄, 1989)
- ③ 김성호, “한반도 군축은 가능한가: 남북한 당국의 군축제의를 해부한다.” 월간 「통일한국」(1990년 1월호). pp.26-31.

平和指向的 呼訴力을 북한은 심분이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론과 군축론을 제기할 때마다 한국측은 거의 반사적으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임으로써 북은 적극적이고 할 의사가 있는데 남은 소극적이며 할 의사가 없는 양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철수론과 휴전협정의 변경이나 대체론 자체를 금기시해 온 한국정부의 종래의 입장에서는 북한측의 군사문제선결론의 공세에 사실상 소극적이며 곤혹스러운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軍縮論이 제기될 때마다 주한미군철수문제는 한·미간에 협의할 문제로서 결코 북한측과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북한측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며 강탈적요구라는 논리로 단호히 배격해 왔다.

그러나 제6공화국정부에 들어와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정부가 남북한 불가침문제를 비롯,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토의하자고 북한측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종래 한국정부가 군사문제선결론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守勢一邊倒의 입장에서 부터 탈피, 적극적인 협의·해결의 입장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이고 강탈적요구로 일관되어온 심리전차원의 군축주장에 정면으로

썰기를 박는다는 의미를 띤다.

특히 1988년 10월 18일 盧泰愚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통체 통일방안」을 통해 밝혀진 군축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과 대북제외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측이 군사문제선결론을 더이상 심리전의 선전차원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軍備統制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⁶⁶⁾

① 남북한간에 기본적인 상호 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선언할 것

②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 실현방안·군사축소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

③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 평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합리적·정상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소·중·일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④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건설을 제의함.

66) 김성호, 위의 자료, p.2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⁶⁷⁾에서는 통일의 중간과정에 남북연합기구를 설치하여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人道主義的·非政治的 接觸과 交流에서 부터 정치적·군사적 문제의 해결로 나간다는 이른바 機能主義的 段階論의 접근방법은 이제 탈바꿈되었다고 하겠다.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순서를 구태여 「선교류협력 후평화정착」이라는 공식으로 정형화하기보다는 가능한 것 부터 또는 동시에 병행추진한다는 伸縮的인 並行 接近方法이 한국의 통일추진전략이 된 셈이다.

더욱이 1989년도 12월 8일 연말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 李相薰 국방장관의 공언은 장차 남북대화, 특히 남북고위 당국자회담에서의 군사문제 논의의 입장과 방향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90년대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군사대결 일변도의 사고방식만으로는 국방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벽한 군사

67) “대통령특별연설(전문)”,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기본해설자료〉(1989.9). pp.41-57.

대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융통성있게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 쌍방이 국가체제 및 안보현실을 상호 존중하면서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현실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⁶⁸⁾ 한국의 현직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군축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측의 군사문제선결론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한국측의 平和定着論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990년 1월 29일 미국방장관의 주한미공군의 일부병력감군계획과 3개 공군기지 閉鎖措置 발표를 시발로 장차 단계적 부분적 철군이 한·미양국의 협의에 따라 현실화 된다고 볼 때, 실질적 차원의 남북한 군축회담의 가능성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은 대미직접협상을 통해 미군철수와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에로의 대체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당사자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의 해결원칙을 한·미 양국이 고수하는 한, 북한의 한·미 이간전술은 무산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豫備會

68) 동아일보(1989년 12월 9일자)

談이 상호신뢰의 결핍과 정치적 이유로 인해 진전은 없는 상태이나 쌍방의 군사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측은 軍事的 信賴構築方案으로 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② 군사훈련의 相互通報와 參觀 ③ 군인사 상호방문 ④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非武裝化 및 平和地帶化를 제의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방안으로서 ① 직통전화 설치 ② 대규모 훈련(팀스피리트 훈련을 의미)의 중지 ③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을 제의해 놓고 있다.⁶⁹⁾

1990년대의 제3기 남북대화시대의 본격화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종래에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던 강탈적이고 심리 전차원의 군사문제선결론은 한국측의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조치 및 군비통제론의 전개로 말미암아 쌍방통행의 軍縮會談論으로 선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我田引水의 用語 解釋과 강탈적 要求

남북대화 20년사가 보여 주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69) “남북군축회담 가능성”, 「조선일보」(1990년 2월 1일자)

북한측이 어떤 형태의 회답이든 우선적으로 原則合意를 주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기본원칙이요 명분이 큰 용어를 선제적으로 내세워 합의를 유도한다.

그러나 일단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방적이고 아전인수적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가로 막거나 會談膠着·中斷의 責任을 轉嫁하는 경우가 많다.

명분의 先占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원칙합의 전술이나 또 공산주의 특유의 혁명적 사고와 정세관의 교조성을 감안한다면, 협상과정에서 원칙합의시의 용어선택과 명확한 개념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술·기교를 꿰뚫어 보지 않은 채, 남북한 쌍방중 원칙합의를 주도한 쪽이 누구며, 원칙에 관한 해석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거나 부정적으로 대응한 쪽이 누구냐를 판단하려 들면, 자칫 誤謬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말은 표현과 형식은 같지만, 그것이 정치적 용어인 경우에는 뜻과 개념이 우리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어를 교란전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언어의 二重戰術이라 한다.

남북대화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통일원칙의 개념과 有效性問題를 비롯하여 적지않은 용어의 해석문제를 놓고 상호 논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 즉 의미와 다르게 해석·인식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원칙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를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석상의 유보권을 쥐든가 처음부터 원칙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⁷⁰⁾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남북한의 논쟁은 그 發端과 경위가 어떠하든 한민족의 위신에 먹칠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때 이 교훈은 銘心해야 할 것이다.

회고컨대,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은 발표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내용도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특히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든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명문화하면서 「조국통일원칙」을 비롯한 7개항의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본다. 또 “이 합의

70) 柳錫烈, 앞의 책, p.397.(“북한의 합의진술”참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명기한 내용들을 상기할 때⁷¹⁾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통일대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로 그날 부터 평양측과 서울측은 합의된 내용 특히 통일3원칙에 대하여 전혀 상반되는 해석과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불길한 前兆를 예고하고 있었다.

과연 우리측이 제시한 통일원칙은 무엇이었으며, 그 개념은 어떻게 정립, 주장했는가? 또 북한측이 제시한 통일원칙은 무엇이며 그들의 개념은 어떠했는가? 최소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통일원칙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반된 견해를 조정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⁷²⁾

「남북공동성명」이 동시발표되던 그 시각에 이미 남북간에는 기이하게도 성명문안에 대한 해석상의 큰 의견차이가 노출되고 있었고 남북대화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었다. 평양에서 공동성명발표후 가진 朴成哲의 기자회견 내용⁷³⁾을 보면, 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은 “김일성수령이 내놓은 제안에 남조선측이 찬동한 것”이라고 강변하는가

71) 「7·4남북공동성명」(전문), 남북대화사무국, 앞의 책, pp.89-91 참고.

72) 南北調節委員會, 「南北對話白書」, p.95 참고.

73)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연구소, 「안보통일문제기본자료집」(續 北韓編)(서울: 동아일보사, 1974), pp.295-297.

하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상 “미제국주의자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침략군대를 걷어 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공동성명 합의과정에 있었던 남북간의 토의내용은 일체 외면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노선의 공공연한 주장과 통일방안선전강화의 계기로 공공연히 이용하려는 저의를 노출시켰다.

바로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李厚洛부장의 기자회견⁷⁴⁾에서는 “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이 유엔감시하의 남북한토착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본통일방안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하여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시비하는가 하면, 9월 29일 국회에서 金鍾泌총리가 “합의는 합의된 내용이 지켜질 때라야 의미가 생기는 것이며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우리는 북한측의 앞으로의 태도를 지켜 볼 것이다.”⁷⁵⁾라고 언급한 것을 가지고 이를 「남북공동성명을 파기하는 것」으로 왜곡·비난함을 서슴치 아니했다.

지금까지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요한 남북한의 입장

74) 동아일보(1973년 7월 4일자).

75) 조선일보(1973년 7월 30일자)

은 서로 다르다. 특히 ① 자주 ② 평화 ③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계속 대립의 주요쟁점으로 남아 있다.

남북한간에 주요합의내용이나 용어해석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사례들은 많으나 본 논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문제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논란된 「인도주의」 두가지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 일별코자 한다.

(1)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祖國統一 原則 問題 :

남북조절위원회 제1회 공동위원장회의(1972년 10월12일 판문점<자유의 집>과 제2차 회의(1972년 11월 2-3일 평양)는 특히 통일원칙의 해석과 합의사항의 具現方法에 관하여 쌍방간에 치열한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측은 공동성명 제1항의 자주·평화통일의 달성과 이를 위한 민족적 단결의 도모를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의 제거, 이해와 신뢰의 증진, 사회적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서울측은 이 같은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쌍방이 일단 각기

자기의 체제를 보호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體制內的 秩序에 대해서는 간섭함이 없이 교류와 협력, 그리고 나가서 상호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쌍방이 통일 3원칙에 합의한 이상 서울측은 ① 대외적으로도 반공정책을 포기, 공산주의를 용납해야 하고, ② 통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지 말아야 하며, ③ 「유엔」도 「외세」이기 때문에 「유엔」은 어떠한 형태로도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④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해야 하며, ⑤ 국군의 전력증강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⁷⁶⁾

심지어 朴成哲은 제2차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와 남조선의 반공정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공법·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석방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는 자들을 오히려 처벌하라”는 부당한 강탈적요구를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⁷⁷⁾

남북회담 또는 대남제의, 북한의 선전물·선전매체를 불문하고 북한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은 김일

76) 「남북대화백서」, pp.104-105.

77) 위와 같은 책, p.106.

성이 제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은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통일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은 중대한 事變으로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초보적 기초의 마련」으로 분석하고 있다.⁷⁸⁾

먼저 「자주」의 원칙을 보자.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自主原則」에 대해 “털어놓고 말하면 자주적 통일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⁷⁹⁾이라고 강변함으로써 자주 원칙을 내세운 그들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1949년 6월 28일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祖統」)결성대회에서 채택한 8개항의 평화통일방안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줄곧 북한이 고수해 왔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통일은 조선인민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달성한다”(제1항)는 것과 “통일을 위한 1차적 조치로 주한미군과 유엔한국위원회는 즉각 철퇴해야 한다”(제2항)는 것이다.⁸⁰⁾

78) 「정치사건」(1973), pp.202-203.

79)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1975), p.203.

80) 康仁德(편), 「北韓全集」, (하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p.4.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주한미군도 외세요, 유엔도 외세이며, 이들과 손잡는 남한정부는 외세에 의존하는 반자주·반민족세력이며 분열주의옹호세력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제국주의 세력」의 보호아래 있는 정권이라면 당연히 「남조선 혁명」의 타도대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외세배격으로 미군을 내몰고 밖으로 부티의 한국문제개입을 원천봉쇄하며, 혁명투쟁으로 남한내의 분열주의세력을 타도한다는 전략적 관점이 「자주」의 원칙속에 뿌리박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남북대화는 북한판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술적 방편일 뿐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 것을 결코 그 어떤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분제를 자체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⁸¹⁾ 한마디로 이는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론의 二重性和 欺瞞性を 입증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6.23평화통일의 교정책 선언」을 비롯하여, 교차승인론, 유엔 동시가입론,

81) 極東問題研究所, 「共產圈資料」 제7권 제3호, (1974년 3월). p.13

한미상호방위동맹체제, 유엔감시하의 南北韓 總選舉統一論도 모두가 「2개 조선로선의 공개적 선포」요 「2개조선의 조작책동」이며 「남북대화의 간판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분열을 고정화」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남한측이 「남북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어 엮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여 「2개조선로선을 취소」하고 「6.23선언」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反共政策」을 「聯共政策」으로 바꿔 북한과 민족적 대단합을 이룩함으로써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⁸²⁾

우리가 말하는 한미우방의 협력관계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외세의존으로 단정함으로써 「隸屬의 길, 亡國의 길」로 매도하고 있다.⁸³⁾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平和의 원칙에 대한 해석의 시각도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정의의 혁명전쟁」을 수행할데 대한 혁명적 방침이 관통되어 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平和共存理

82)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연구소(편), 앞의 책, p.424.

83) 「현대조선말사전」(1981년판), p.2925 참고.

論」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⁸⁴⁾는 입장에 서고 있다.

평화의 성격을 전쟁과 마찬가지로 특정계급의 정책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고있다. 환언하면,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의 평화는 侵略政策의 연장이며 자기나라 근로자들과 식민지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평화이다. 이러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교란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 엮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평화를 戰取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이 기본이다.”⁸⁵⁾라는 북한공산주의 특유의 戰鬥的 平和觀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 공존」이라는 용어 자체의 풀이에 있어서도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⁸⁶⁾로 못박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와같은 전투적 「평화」개념인식은 사실상 그 發想源이 여타 공산주의자들의 고식적인 개념과 동일선상

84)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p.210.

85) ① <김일성저작선집, 3권, 415 페이지>.

② 「정치사전」, p.1163 참고.

86) 「현대조선말사전」, p.2225. 「평화적 공존」란 참고.

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평화」란 글자 그대로 서로가 화목하며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즉 전쟁과 소란에 반대되는 靜的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전세계에서, 또는 한 국가 사회내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일체의 요소가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동적이며 투쟁적인 개념인 것이다.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평화는 곧 반동을 뜻하는 것이며, 공산혁명을 위한 인민전쟁을 평화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다. 그들이 평화를 강조할 때는 물리적인 힘이 부족할 때로 양성적이고 노골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적대와 비방, 파괴와 내부교란 등 음성적 전쟁을 앓겠다는 것은 아니다. 양성적이건 음성적이건 전쟁은 무단히 지속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므로 그들에게는 평화가 곧 전쟁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⁸⁷⁾

아무리 「革命的 樂觀主義」로 무장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교조적이고 독단적인 평화의 개념인식을 철저히 고집

87)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민주」·「민족」·「평화」는 우리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統一研修院, 「統一問答」(서울: 延文社, 1990), p.113.

해은 장본인이 곧 우리의 대화 상대인 북한임을 새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록 동구개혁의 도미노현상과 베를린장벽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로써 실질적 관계개선과 분단문제해결을 시도해 나가는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予見케 해준다.

「자주」의 원칙과 「평화」의 원칙은 상호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미제국주의세력의 퇴진」즉 주한미군철수를 강요하기 위한 「反美自主化」鬭爭과 연결되고 있으며 동시에 외세에 아부 굴종하는 「팻쇼매판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반팻쇼民主化」鬭爭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적극 표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번째 조국통일의 원칙인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민족(적) 대단결」의 북한측 정의를 보면, 「김일성이 내놓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는 것”⁸⁸⁾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名分的이고 抽象的인 정의가 남북대화과 관

88) 「현대조선말 사전」, p.1048.

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는 김일성 자신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명료하다고 할 것이다.

1978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30주년 경축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가운데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주요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⁸⁹⁾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진심으로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분열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도를 모색할 수 없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반공법·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팻쇼」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통일혁명당」을 비롯하여 지하에 있는 정당들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89) 「남북대화백서」, p.177(「평양방송」, 1978년 9월 9일 오전 9시 55분보도 재인용).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 단체들과 애국인사들도 자기의 의사대로 남조선에 들어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해내외의 민주주의 역량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팻쇼」독재세력과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위에 인용한 김일성의 언급내용을 보면, 「민족대단결」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순수한 민족자결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반외세자주통일을 위하여 힘을 합치고 뭉친다는 전통적인 저항민족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적 대단결」의 뜻은 다음 세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로서 앞서 분석한 「자주」·「평화」원칙의 혁명투쟁성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민족의 단합과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는 민족대단결은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反共自由民主主義體制 守護法 體系의 철폐와 지하당 즉 공산당의 합법화를 허용해야 「민주화」가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결국 「팻쇼독재세력」의 타도

를 위한 「民族大統一戰線」의 형성에 전략적 관점을 두고 있다.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한다든지,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든지 또는 「민주주의 역량」 운운하는 것은 선전효과를 겨냥한 欺瞞的 名分의 動員으로서 용어자체에 현혹되거나 오판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 경우, 물론 북한이 사용하는 「민주주의」용어의 개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自由·平等·博愛思想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민주주의도 계급적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로서 착취계급의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곧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⁹⁰⁾ 라고 못박고 있다.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혁명」⁹¹⁾을 표방할 때의 개념도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90) ① 「현대조선말사전」, p.1051.

② 통일연수원, 앞의 책, p.112 참고.

91)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남조선혁명」론과 동의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① 拙稿, 「북한의 대남전략론」(통일연수원, 1980), 특히 pp.11-13(“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분석”).

② 康仁德, 「北韓政治論」(서울: 삼성인쇄, 1976), pp.547-560(“1970년대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요컨대, 북한은 「민족적 대단결」원칙을 그들의 統一戰線 戰術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전술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저의는 「민족적 대단결」을 위해 한편으로는 “남조선에 사회주의 제도를 강요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1972년 5월 28일 김일성, 「뉴욕타임즈」지 회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이 팻쇼악법을 없애고,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하며, 反共政策을 聯共政策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1975년 10월 9일 조선로동당 창건 30주년 김일성 보고)하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사상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체제·사상으로 전환하며 공산주의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서로 모순·상충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南北共同聲明의 제1항인 「조국통일3원칙」은 김일성이 발기하여 남북이 합의한 것이며, 유일한 조국통일원칙이라고 내세우고 있을 뿐 나머지 남북한 긴장완화 및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회피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제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북공동성명 제6항에 의해 발족

된 南北調節委員會마저 그 존속의의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존재를 일체 부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7.4 남북공동성명」은 인체의 머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의 원칙만 남고 실질적인 인체의 몸통과 지체라고 할 수 있는 6개항의 합의사항은 사문화됨으로써 하반신불구의 가분수 머리를 가진 기형아로 전락되고 만 셈이다.

(2) 南北赤十字會談에서의 「人道主義」問題

누구든지 적십자정신이라고 하면, 으레 인도주의적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 또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문자그대로 인도적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非政治會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 과정에서 「인도주의」문제를 위요하여 남북간에 벌인 용어해석의 논쟁과 북한측에 의한 정치선전강화 시도의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주의」문제에 대한 쌍방간의 개념인식의 차이와 대립은 북한측의 「法律的·社會的條件環境改善論」의 선결조건주장과 더불어 필경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남북적십자회담을 교착으로 몰고 간 가장 주요한 쟁점의 하나로 되고 있다.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대화라는
 벅찬 감격과 기대속에서 진행된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예비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1972년 8월부터 1973년 7월까지 서울
 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1차 본회담(평양)과 제2차 본회담(서울)은 최초의
 남북적십자회담대표들의 왕래실현이라는 역사적 의의등으
 로 祝祭霧圍氣속에서 진행되었다.

제2차 평양회담은 양측 수석대표의 개회사와 북한측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의 축사 그리고 본회담의제의 공식
 채택 등 의례적인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본회담의 진행원칙
 에 관한 합의문서는 예비회담에서 기합의된 5개항의 의제⁹²⁾
 를 본회담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남북한
 쌍방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들의

92) 1972. 6. 16. 판문점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채택한
 南北赤十字會談 議題는 다음과 같다. (「남북대화백서」, p.121)

-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訪問과 자유로운
 相逢을 실현하는 문제
-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通信去來를 실시
 하는 문제
-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問題
- ⑤ 기타 인도적으로 解決할 問題

고통을 풀어줄 것을 재다짐하는 것이었다.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는 특히 제2장에서 “쌍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이 천명된 남북공동성명과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적십자 회담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해결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거래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⁹³⁾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南北共同聲명의 3대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에서도 「적십자인도주의 정신」의 철저한 구현을 강조되고 있다. 합의서 제1장을 보면, “쌍방은 온 거래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南北共同聲명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한다”⁹⁴⁾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합의서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남북한이 전혀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이나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의

93) 위와 같은 책, 같은 면.

94) 위와 같은 책, p.121.

해석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차회담의 합의서의 경우, 제2항에서는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발표함으로써 상당수준까지 이해와 신뢰분위기가 조성된 감을 줌으로써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의 수석대표들이 개회연설과 북한측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의 축하내용을 보면, 政治演說 一色이었다. 따라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쌍방의 시각차도 심각하며,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적십자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리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당시 韓赤側의 李範錫 수석대표는 북적측의 「선결조건」 문제해결요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십자정신과 적십자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문제란 법률이전, 정치이전, 체제이전의 숭고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십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여하한 기존의 법률적 조건에도 저해를 받음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大韓赤十字社의 전통이고 國際赤十字의 전통이며 또한 순수한 인도적 견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北赤側은 한국의 반공관계 법률의 철폐를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길은 바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인도주의사업이라고 해서 조국통일문제와 분리하여 다룰 수 없으며 오로지 통일문제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남한의 반공관계 법률이 선행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산가족·친척 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짓고 순수한 적십자인도주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거부하였다.⁹⁵⁾

또한 제2차 본회담의 경우 金用雨 韓赤총재는 축사에서 “양측이 서로 차이점을 찾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금년(1972년) 적십자의 세계표어가 <인도주의의 架橋>이므로 동포애와 민족적 사명감으로 이 가교에 서광을 비춰주기 위해 모든 불신과 쓰라린 과거를 모두 묻어버리자”고 호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적측 金泰禧團長을 비롯한 尹基福, 金炳植 두 자문위원은 제1차 회담때와 같은 정치선전으로 일관된 연설을 하여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며 내외여론을 놀라게 했다.

金泰禧 團長은 개회연설에서 “조국통일이야말로 최고의

95) 위와 같은 책, pp.118-119참고.

인도주의이며 분열로 인한 거래의 고통을 가장 철저하게 풀어주는 것”이라는 등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아예 제쳐놓고 당장 통일문제로 뛰어들자고 강조하는 발언으로 시종했다.⁹⁶⁾

북적측은 「통일은 곧 최고의 인도주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등 정치적 발언을 반복해 마치 남북적십자회담이 인도주의회담이 아니라 「통일회담」, 「정치회담」인양 착각케 하는 脫線的인 입장을 취했다.

북한측이 정의하고 있는 「인도주의」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귀중히 여기고 옹호하는 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는 또다시 「부르주아 인도주의」와 「社會主義的 人道主義」로 양분하여 “부르주아 인도주의는 근로인민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가리우려는 위선적인 것이다. 참다운 인도주의는 오직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이다.”⁹⁷⁾라는 식의 黑白論理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해석은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인도주의」

96) 위와 같은 책, pp.122-123.

97) 「현대조선말사전」, p.2871.

와 「特殊的 概念으로서의 인도주의」로도 구분할 수 있다.⁹⁸⁾

普遍的 概念으로서의 인도주의는 인간 본연의 博愛精神과 道德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주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수적 개념으로서의 인도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적 상황여건하에서 민족분열의 고통과 전쟁재발의 위험이 사라진 상태 즉 조국통일을 至高의 인도주의로 간주하는 것이다.

북한측의 인도주의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다음의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⁹⁹⁾

•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또 어느 때나 그리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인도주의가 아니다.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해야 할 민족적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人道主義 문제이다.” (제21차 실무회의 회의록)

• “사실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는 민족의 분열로서 발생되었고 나라의 통일로서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시종 민족문제와 함께 제기되며 민족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23차 실무회담 회의록)

98) 국토통일원, 「南北對話會議錄 分析」, pp.81-82.

99) 위와 같은 책, pp.82-83.

이상 살펴본 북한의 주장에서 볼 때, 결국 남북적십자회담의 목적은 人道主義의 실현이고 人道主義의 실현은 곧 祖國統一 달성에 있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측이 인도주의와 조국통일을 항상 직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끔 名分論에 집착해서 적십자회담을 선전목적에 이용코자 할 때에는 普遍的 개념으로서의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일방, 그 여세를 몰아 對南 誹謗宣傳을 가열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진행과정에서 본의와는 역행되게 실질토의에 들어가도록 有形無形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 북한은 「보편적 개념」으로부터 「특수적 개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은 적십자 인도주의의 보편적 개념과 특수적 개념 즉 명분과 실질을 번갈아 가면서 會談戰術上 필요한 때에 적절히 驅使하는 用語解釋의 二重性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 南北對話 姿勢面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결같이 보여온 협상자세는 「敵對的 協商」, 「협상 없는 협상」이라고 할 정도로 완고하

며 융통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시각에서 보면, 최근 고르바초프의 開放·改革政策의 본격적 추진과정에서 소련이 취하고 있는 대미군축 협상에서의 융통성과 타협적 태도는 엄청난 변화이다. 사실상 종래의 비타협적이고, 교조적인 공산주의 특유의 협상행태를 과감하게 탈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협상다운 협상」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라 할 수 있다. 소련에 연이어 여타의 공산국가들도 공산권전역에 휘몰아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물결에 시련을 겪는 가운데 냉전의 와중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에 대하여 종래와는 다른 유화적 접근과 화해 협력의 자세를 가다듬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정책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제 적대로 부터 화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역사의 큰 물결은 동서협상에 있어서도 일방적 승리, 일방적 패배, 完全勝利 完全敗北를 겨냥하기 보다는 공동승리의 순수한 협상의 원리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협상자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필경 북한은 협상전술면에서 세계어느나라 보다도 「매우 교활하고, 민첩하며, 철면피한

행동양식』¹⁰⁰⁾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협상대상으로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존재라고 할 것이다.

남북대화 20년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북한측협상요원의 행태 가운데 전형적인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會談의 主導權 掌握 試圖

북한의 협상자세를 보면, 거의 생리적이라 할만큼 명분의 확보와 선전의 附隨效果 개발에 집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공개회담의 경우, 어떤 형태의 회담이건 간에 최초의 제의단계에서 부터 시작하여 회담장에서의 환담과 협상진행과정을 거쳐 회담종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 까지 북한측은 機先制壓·主導權장악을 시도함으로써 회담의 전반적 흐름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애당초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명분과 선전의 싸움을 겨냥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더욱 노골화된다.

이러한 연고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북대화 20년사는 솔직담백하고 차분한 회담, 상호존중하는 회담보다는 二重

100) 柳錫烈, 앞의 책, p.391.

같은책에서 필자는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윤리·도덕관에 구애받지 않는 이윤배반적 행동, 허위사실의 반복주장, 합의사항의 자의적 위반, 선전전과 지연작전 구사, 일방적 해석고집 등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pp.396-397 참고)

的이고 빈수레 처럼 요란한 一方的 주장으로 점철된 비생산적 회담, 또는 합의에 까지 도달했으나 책임있는 실행이 수반되지 못한 채 枯死하고만 未完成 會談들의 기록들을 많이 남길 수 밖에 없었다.

회담제의 단계를 보면, 主·客觀的情勢를 판단할 때 대남 혁명전략수행에 도움을 주고 對內外政治心理戰목적에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북한은 언제든지 과감하게 선제제의를 한다. 10.26사태직후의 남북총리회담제의와 1984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관련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 1985년의 남북국회회담제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측이 먼저 제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측은 이를 단순히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오래 전 부터 북한측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주장해 오던 것을 남한측이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대화의 마당에 나오는 것으로 粉飾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측 제의와 비교할 때 보다 더 통일지향적인양 그들 특유의 통일접근의 논리를 반복 주장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회담제의내용을 담아 역제의 한다. 이는 마치 북한측이 남한측이 제의한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것처럼 부각시키자는 것이다. 1971년 8월 南北赤十字會談提議가 그 단적인 예이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측은 총재의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가족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사대표회담」을 제의하고 10월안으로 제네바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적십자회측은 孫成弼위원장 명의로 大韓赤十字社 總裁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한적십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문제중의 하나」라고 강조함은 물론, “가족찾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하면서 ① 가족·친척·친우들의 자유왕래·상호방문실현문제 ② 가족·친척·친우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실시문제 ③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 주는 문제등을 토의의 제로 추가하고 있다. 또 남한측이 제의한 「10월안 제네바 예비회담 개최」에 대하여 북한측은 「9월안 판문점 예비회담 개최」를 수정제의하고 「8월 20일 12시 파견원 접촉을 통해 판문점에서 서신수교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상당히 적극성을 띤 내용을 담아 통보하고 있다.¹⁰¹⁾

또한 북한측은 南北體育會談의 경우, 올림픽 참가를 위한

101) ① 국토통일원, 「南北韓統一·對話提議 比較(1945-1986)」, (서울: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76) p.115.

②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대화백서」, pp. 69-70 참고.

단일팀구성을 先制提議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제의검토단계에서 이미 단일팀구성은 끝내 성사시키지 않는다는 전략목표를 세워 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회담주도권을 장악하여 일정단계까지는 적극성을 시현함으로써 명분과 선전의 효과를 얻는 한편, 지연전술과 기만전술등을 동원 회담진행의 속도를 조절하다가 끝내는 회담을 수령으로 몰고 가려고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북한측의 전술적 파행은 1990년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참가를 위한 體育會談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측제의로 1989년 3월 9일 성립한 남북체육회담은 단가·단기·단일팀명칭 등 상당부분 합의를 보다가 결국 1990년 2월 7일 제9차 본회담에서 북한측이 또다시 先決條件을 내세움으로써 사실상의 결렬위기에 봉착했다.

회담진행단계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도 북한측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우리측은 대체로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중요시함으로써 형식과 절차문제는 상당수준까지는 거의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의 공개여부, 수석대표의 기조발언 순서 및 의제토의 순서와 시간배정, 차기회담 개최일정에 이르기 까지 자기측의 회담전술방침을 관철하려고 시도해 왔다.

예를 들면,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의 경우, 회담의 공개여부문제는 북한측의 대화의도와 직결시켜 합의생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비공개,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공개에 의한 宣傳戰을 획책했음을 보게 된다. 회담초기에는 주로 비공개를, 회담후기에는 공개주의 원칙을 북한측이 고집했다.¹⁰²⁾

수석대표의 발언순서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제발언을 시도한 사례까지 발견된다. 즉 버마아웅산暗殺爆破事件을 자행한 북한측이 돌연 1984년 3월 30일 동년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제23회 올림픽경기대회와 그후에 계속 있게 될 아시아 및 세계 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 남북한체육회담의 경우이다.

그 당시의 상황은 북한당국이 버마사건에 대한 是認·謝過조차 하지 않고있는 때였다. 이 회담을 통하여 북한측은 버마 사건을 남한측에 의한 「造作劇」으로 몰고 가며, 올림픽단일팀구성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 평화공세를 취함으로써 세계의 여론을 돌리려는 戰略的 底意를 깔고 있었다. 북한측은 예상대로 철면피하게 버마사건을 남한의

102) 국토통일원, 「남북대화회의록 분석」, pp. 86-87 참고(“북한의 주요 협상전술”부분)

자작극으로 모략했으며, 우리측의 시인·사과요구를 체육문제토의장소에서 정치문제를 거론 한다고 비난하고 나왔다. 오히려 우리내부문제(「光州事態」등을 집중거론)에 대한 中傷·비방으로 맞부딪쳤을 뿐아니라 일방적 퇴장, 성냥갑 던지기, 기자들까지도 합세하여 책상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등의 고의적 도발행위를 서슴치 않음으로써 회담자체의 분위기를 상대정권에 대한 비방·설전장화내지 일종의 난장판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남이나 북이나 피장파장이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내외에 부각시킴으로써 그만큼 아웅산事件에 대한 논쟁에 食傷感을 주고 사실상의 論爭終結宣言을 앞당기려는 북한측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¹⁰³⁾

결국, 시기적으로나 상황면으로 볼 때, 사실상 단일팀 구성·출전은 이미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어떠한 회담이든 끝까지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는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측이 일방적 중단조치를 강행한 제3차회담(1984.5.25)까지 임하였다.

103) 회담에서 보인 북한측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북한의 LA올림픽불참과 회담의 중단”(특히 “불성실한 회담자세”, “회담진전기피 및 난관조성”부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로잔노 남북체육회담백서」(서울: 천일인쇄사, 1989), pp.31-39.

그런데, 2차회담의 경우, 수석대표의 기조발언 순서의 엇갈림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치졸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려고 하자 거의 동시에 북한측 수석대표가 선제발언을 시도함으로써 남북한 수석대표가 동시에 기조발언을 강행하는 寸劇이 벌어진 것이다. 어떠한 회담이든지 1차회담은 제의한 측이 먼저 기조발언을 하고 2차회담은 수락한측이 함으로써 윤번제로 실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남북대화 20년사에 있어서 공개회담석상에서 마이크를 통해 두사람이 동시에 기조발언을 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북한측대표의 무례함과 상식이하의 치졸함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내외로부터 잇달았다. 이는 한민족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였다.

이 경우, 북한측은 의도적으로 先制奇襲發言을 강행한 것이 분명하다. 그날의 회담운영전술은 문자 그대로 적대적·도발적자세를 견지하되, 상대방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자극하기 위한다 초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제발언을 통해 북한측의 논리를 부각시키고 북한측이 의도한대로 회담분위기를 격화시키며 동시에 우리측대표들의 발언진행 중 북한측에 대한 비판성발언, 예컨대 아웅산사건의 사과요구, 김부자세습체제비판 내용이 나올 때에는 가차없이 방해

발언으로 대응, 회담결렬의 구실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이 시도해온 남북회담의 주도권 장악전술은 누가 더 민족이익을 앞세우며 진실한 회담을 주도하려고 하느냐의 선의의 경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남북대화 회담기록은 보여주고 있다.

(2) 徹頭徹尾 指令에 의한 야누스의 言行 驅使

北韓共產體制의 特性 가운데 하나는 金日成과 黨을 중심으로 한 일원주의적 유일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방침과 정책은 철두철미 수직적인 명령체계에 의하여 지령되고 집행되며 일단 결정된 방침과 정책은 담당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 세부추진계획으로 발전된 후 일사불란하게 추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대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을 정점으로 하여 당기관을 통해 대화전략방침이 결정되고, 일단 이 방침이 명령계통에 따라 지령되면, 사실상의 남북회담전담기관인 「祖平統」이 세부 회담 운영방안을 작성한다. 또한 「祖平統」은 회담별 전술계획을 마련, 회담대표단의 사전훈련과 발언시나리오 작성은 물론 사전회담요원훈련과 모의연습, 회담장에서의 행동요령지침

과 사후 선전계획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측 협상대표들의 경우, 북한사회내에서 엄격한 성분조사와 자격기준에 따라 선발되는 것이 확실하며, 그런 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상이 투철하고 명령계통에 철저히 복종하며,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핵심공산당원의 역할을 감당 할 것이라는 前提意識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북한대표들의 얼굴과 용모가 깨끗하고 말솜씨가 부드러운 용어를 구사한다고 온건파다 또는 말이 통한다는 식의 표피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남북회담장의 북한측대표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그리고 회담 수행원이 건네주는 메모쪽지의 지령내용에 따라 조작되는 「인간녹음기」·「인간기계」와 흡사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북한측 協商要員들은 공개회담의 경우 개인의견을 말하는 적이 없다. 지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짜여진 會談運營脚本에서 이탈하는 법이 없다. 마치 각본에 따라 그대로 읽고 행동하는 연극배우와도 같다. 우리측의 경우 처럼 가끔 개인적 의견을 곁들이거나 자그마한 실수를 범하는 우를 결코 허용치 않는다. 그들은 조직생활 속에서 사상 교육을 통해 길들여진 共產主義 革命人間으로서 지령을 수행하는데 전력을 쏟을 뿐이다.

남북대화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북한측 협상요원들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행동과 철두철미 자기측 논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선전행위를 매 회담마다 확인할 수 있다.

북한측 요원들은 極과 極을 대수롭지 않게 오고 간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나 체면 때문에 엉겨주춤하는 법이 없다. 앞서 지적한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던 판문점 남북체육회담의 경우가 그 웅변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북한측 대표들은 성냥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판문각으로부터 급히 메모가 들어 오자, 이를 받아 확인한 북측수석 대표의 신호로 모든대표들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담탁자에 되돌아 와 앉아서 숨치 않고 “회담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는 식으로 태도를 표변한 예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¹⁰⁴⁾

會談別 事案에 따라 북한측은 強硬과 柔和, 實質討議遲延과 早期妥結, 일촉즉발의 威脅 雰圍氣와 祝祭雰圍氣 조성, 강탈적 요구와 선결조건의 유보, 一括妥結論과 事案別 合

104) 북한측은 어떠한 경우이든, 金父子세습체제비판을 접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상례인데, 이 경우는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폐쇄TV회로를 통해 회담진행상황을 지켜보던 평양측 고위층이 직접 지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하간 이같은 사례는 북한측 협상요원들이 철두철미 각본과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意, 便宜主義와 相互主義, 위장·기만과 묵시적 인정, 회담 상대방대표에 대한 資格是非·誹謗과 認定, 회담규모의 확대와 축소 등 兩極을 오가는 야누스적 회담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회담대표들의 행태는 회담현장에서 그저 임기응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계획된 각본과 지령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고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남북한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국가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고, 또 회담별 기본전략방침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회담대표들은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상당히 신축성 있게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대표로서의 양심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銘心하고 있는 것이다.

(3) 責任轉嫁의 常習化

남북대화 20년사에 있어서 責任轉嫁戰術은 북한의 專賣特許나 다름이 없다. 북한은 회담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남북대화를 성과없이

지연시키거나 延期·決裂·中斷·破綻시킨다. 이럴 경우 동원하는 수법이 이른바 책임전가전술이다. 왜 “북한만이 임의의 시기에 대화를 중단시켜왔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측은 어떤 회담이던 먼저 물러서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의 입장에서는 필경 한국측이 대화를 선제중단할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기다리지도 않는 것이다.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延期·中斷·破綻시키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측은 서슴치 않고 이를 중단시킨다.

그러나 무작정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을 함으로써 초래될 내외의 비난을 의식, 責任轉嫁手法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필경 북한측은 도리없이 이러한 수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꼬집어 말하자면, 북한측은 「責任轉嫁의 捕虜」가 될 숙명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임전가수법은 구실을 필요로 한다. 북한측이 상투적으로 써온 구실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이른바 「先決條件」(「前提條件」)주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측의 「선결조건론」은 耳懸鈴鼻懸鈴 같은 내용이어서 常備藥처럼 동원되고 있다.

제2기 남북대화시대 이후에는 팀 스피리트 韓美合同軍事 연습의 무조건 중지 등 군사훈련문제를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民主人士釋放」 「팻쇼惡法撤廢」 · 「反共政策의 聯共政策에로의 轉換」 · 「反統一對決 · 分裂主義路線 등 인위적 장애造成 금지」 등 한국내정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측이 최근에 구사하고 있는 대화중단의 책임전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南北會談北側代表團聯合聲明(1990. 1. 23)¹⁰⁵⁾

• “말로는 통일을 외우는 남측회담대표들이 앞에 나서서 영똥하게도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는 콘크리트장벽이 없다는니 우리의 구국방안(90. 1. 1김일성 신년사제의 내용임)이 정치선전이니 하면서…인위적인 난관까지 조성하고 있다.”

•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온민족의 통일 의지와 함께 막을 수 없는 세계자주화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제손으로 자기가 쌓은 장벽을 허물고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촉진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 “문제는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를 온민족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105) 「로동신문」(1990년 1월 24일자)

② 祖國平和統一委員會 聲明(1990. 1. 23)¹⁰⁶⁾

• “미제가 70년대에 시작하여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북남 대화앞에 차단봉을 가로질러온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올해에도 계속 벌여 놓으려는 것은 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본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과의 대화도, 거래의 통일열망도 외면하고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여 놓으려는 남조선군사파쇼도당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 “전쟁연습은 대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화약내 풍기는 속에서 신의있는 회담을 생각할 수 없으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대결에 이용될 뿐 응당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남조선당국자들은 진실로 남북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외래침략군 무력을 끌어들이며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여놓는 대화부정·완화부정·통일부정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감행할 것이 아니라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거둬치우고 민족적 입장, 평화와 통일의 입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 “남조선당국은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106) 위와 같은 신문.

지게 될 것이다.”

③ 外交部 聲明(1990. 1. 22)¹⁰⁷⁾

● “...북남대화들에서 결실을 가져올 전망이 내다보이고 있는 때에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공격 연습을 벌이기로 한 것은 북남 대화에 제동을 걸고... 고의적인 군사적 대결소동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대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 “전쟁연습소동을 끝내 감행한다면...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④ 「로동신문」 論評(1989. 12. 28)

● “올해에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남국회 합동회의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상봉, 체육회담, 적십자단체들 사이의 실무대표접촉 등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었다...그러나 대화도 많이 했고 정력도 들였으나 어느 하나도 열매를 맺은 것은 없다.”

●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의 대화와 통일에 대한 그릇된 입장과 불성실한 자세 때문이다...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면서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고 문제토의의 진전을 가로 막았다.”

107) 「로동신문」(1990년 1월 23일자)논평, “남조선당국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 “...민주인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애국적인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폭압공세를 벌리는 한편, ... 반역적 입장에서부터 그들은 회담전과정에 시종 일관 극히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 “남조선당국자들은 올해의 대화들이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게 한데 대하여 거래앞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⑤ 南北體育會談9次本會談 북측 김형진단장의 기초연설 (1990.2.7 판문점 평화의 집)¹⁰⁸⁾

• “남조선측은 당초부터 단일팀구성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3대 전제조건을 제시. (㉠ 북경대회에 별개의 팀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이를 내외에 선포할 것 ㉡ 합의사항 보장 이행장치로 제시한 부칙을 철회할 것 ㉢ 북경대회에 개별팀으로 가겠다는 남측 KOC「대한올림픽위원회」관계자의 발언을 취소할 것 등)

(4) 金日成唯一體制의 宣傳機會로 利用

북한은 남북회담장의 안팎에서 또한 회담의 진행과 중단 여부를 불문하고 時空을 초월하여 金日成唯一獨裁體制의 통치명분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치선전을 시도한다.

108) 「조선일보」(1990년 2월 8일자)

무엇보다도 북한은 남북대화의 성립과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 합의 자체를 「김일성의 통일방침의 위대한 결실」이며 「김일성 수령이 내놓은 것을 남한측이 찬동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⁹⁾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침과 그 위대한 생명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사람 자신의 힘으로 민족내부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확고한 주체적 입장과 민족적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방침과 남북사이의 폭넓은 접촉과 협상방침의 위대한 결실이며, 남과 북사이에 이와 같은 폭넓은 접촉과 교류의 결실은 오직 김일성이 조국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으로 우리인민을 확고히 영도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함으로써 金日成의 統治力을 부각시키고 있다.

109) ① 金河龍·金南植, 「공산측의 協商테크닉 분석」(1973. 6. 상반기용역보고서), pp.57-58. 재인용.

②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대화백서」, p.97.

더 나가서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반영된 것으로서 「남조선측이 찬동한 것」이며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외세를 배제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당과 공화국의 노력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 본회담(1972.8.29-9.2 평양)과 제2차 본회담(1972.9.12-16)에서 공공연하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였다.

제1차 본회담의 경우, 북한의 勞動黨, 社會民主黨, 在日朝總聯, 天道教育友黨, 職業總同盟, 農業勤勞者同盟,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民主女性同盟 등 8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축하연설과 축전낭독으로 대부분의 회담시간을 소비하였는데 북한측의 이른바 「축하연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主體思想」선전과 「정당·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회담사업 참여」등과 같은 政治演說一色이었다.¹¹⁰⁾

제2차 본회담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문위원 尹基福과

110) 「남북대화백서」, p.115.

金炳植을 각각 내세운 「祝賀演說」을 통해 「金日成 唯一思想」을 적극 선전하였다. 특히 尹基福은 시종일관 「영광스런 민족의 수도 평양…」,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운운으로 노골적으로 金日成의 선전을 늘어 놓았다.¹¹¹⁾

최근의 사례를 또한가지 들어보자. 1990년 1월 23일 「남북회담북측대표단 연합성명」¹¹²⁾ 내용을 보면, 김일성 신년사의 대남 제의와 관련, 김일성을 찬양하는 일방, 한국의 대화 자세를 비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남조선의 진보적 인사들과 각계각층인민들은 우리의 구국방안을 1990년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 민족의 활로를 밝히는 등대라고 하면서 이 방안에 지체없이 응해 나올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정당들에게 거듭촉구하고 있다.”

-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구국방안과 북남대화방침은 1990년대에 조국의 통일위업을 실현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고무적 가치이다.”

- “남측회담대표들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걸으로는 우리와 자유내왕과 전면개방회의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그 실현을 회피하고 인위적 난관까지 조성하고 있다.”

111) 위와 같은 책, p.123.

112) 「로동신문」(1990년 1월 24일자)

위에서 열거된 선전내용들을 보면, 내외의 不特定多數를 대상으로 한 선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특히 북한주민들을 의식한 대내정치선전을 겨냥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같이 북한은 남북대화를 附隨效果開發次元에서 金日成唯一獨裁體制의 유지·강화를 위한 대내정치심리전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南北對話 20年史를 통해 본 북한의 대화협상전술은 이른바 「남조선혁명」과 북한 旗幟下의 「合作統一」이라는 戰略路線에 따라 그 전개방향과 유형이 定型化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야누스적 行態, 상호모순되는 二律背反的 주장과 행동을 취함으로써 신축성이 있고 행동반경이 넓은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치가 못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 특유의 가치관과 혁명투쟁의 시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술은 철저히 전략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심리전적·工作的 次元의 변화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책결정·조정·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전략노선의 변화 없이 전술적 행동이 전략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恣行自在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전술적 변형은, 마치 시계추가 일정한 공간의 좌우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제한된 범위내에서 특정상황조건을 감안한 二重的 協商戰術을 구사하는 것일 뿐이다.

1990년초 현재의 상황을 놓고 평가할 때, 북한은 信賴造成, 平和定着, 交流協力, 關係正常化, 民族和合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화 협상에 임해왔다고 볼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전술적 차원에서 대화 협상의 부수효과 개발 확산에 주력해 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 성립으로 부터 오늘날 까지 북한정권은 대남혁명 전략노선을 계속 고수해 왔으며, 최근에는 객관적정세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恣意的으로」¹¹³⁾ 변화를 拒否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정권은 20세기 마지막 10년에 접어들어 「객관적 정세」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하고 있으며, 「최후의 공산국가」¹¹⁴⁾, 「변함없는 社會主義 東方哨所」¹¹⁵⁾로서 끝까지 버틸 태세인양 여전히 호언하고 있다. 과연 “베를린 장벽은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버티고 서있을 것이다”라고 호언하던 호네커 前 東獨共產黨書記長의 末路가 한반도의 북녘땅을 반세기 동안 지배해온 金日成集團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할 뿐이다.

여하간, 북한은 南北對話 20年史에 관한 限, 다음과 같은

113) 북한정권담당자들은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개혁」의 거센물결을 원천적으로 봉쇄·逆流할 수 없는 「객관적정세」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내정치적 요인, 남북관계요인 등으로 「혁명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 버틸 때까지 버티는 일종의 지구전법을 고수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는 오늘날 북한정권이 처한 곤궁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4) 사토 가쓰미, “북한은 최후의 공산국” (특별기고), 「중앙일보」(1990년 1월 15일자)

115) 김일성신년사(1990년 1월 1일) 참고.

다섯가지 특징을 계속 시현했다고 평가된다.

첫째, 어느 경우이든 기본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키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대화 협상을 시도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대화의 시종과 진행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북한 주도하에 두려는 주도권 장악에 執着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쌍방통행적이라기 보다는 일방통행적 또는 강탈적 비타협 行態로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대화 협상의 형태·時空을 불문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전의 부수효과를 극대화해 왔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남북대화 협상의 진행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강화, 남한의 체제약화라는 二分法的·양자택일적 等式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적대적 협상」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넷째, 선결조건의 반복 주장, 政治·軍事問題 先決論 執着 및 責任轉嫁의 常習化는 북한이 대화협상의 진행速度와 현안문제의 生産的 協議가능성의 향방을 가늠하는 尺度가 되어 왔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협상으로 말미암아 북한체제가 동요되거나 또 그럴 우려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한, 회담의 진전을 봉쇄하며 전술적 행동반경이 小幅을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체제 자체가 개혁과 개방의 충격

과를 완충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 판단을 內心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현단계에서의 남북대화와 협상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이 변화하는 상황과 역사의 큰 물결을 언제까지 거역하면서 개혁거부의 논리와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또한 남북대화 협상에 있어서 북한측이 언제까지 羊頭狗肉의 전술적전개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고삐는 늦추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전략적 변화의 시기가 1-2년내에 도래하리라고 단정하여 전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한의 국력의 격차 확대, 실질적 體制競爭에서의 優劣의 판가름 등으로 북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내외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불가피한 開放과 體制存立을 위한 統制사이에 북한의 갈등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관계면에서도 多元的 秩序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對南北韓관계 再調整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화되고 있다.

남북대화·협상에 있어서도 「知彼知己百戰不殆」의 智慧는 그대로 적용된다.

북한의 협상전술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진전과 중단 또는 교착에 一喜一悲하는 早急性과 挫折感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화합의 大道를 앞내다보면서, 忍耐와 誠實, 포용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남북대화·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라고 단순히 남북한대표들의 會同이라고만 보지 말자. 이 회동을 가까이서 또는 먼 발치에서 응시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구성원들과 이웃나라들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호인들을 의식하자.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참다운 남북대화」를 하라고 종용할 수 있는 중재자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향하여 “남북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라, 변화하라”고 촉구만 하기 보다는 남북대화의 광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여건을 촉진하는데 더욱 心血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큰 물고기를 많이 얻으려면 가까운 곳, 얕은 데에만 집착하여 그물을 던지기 보다는 먼바다 깊은 바다속으로 힘차게

그물을 던지는 智慧를 터득하자는 말이다.

지금은 그어느때 보다는 참다운 남북대화외에는 별도리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회담장 밖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北韓의 協商戰術

1990年 3月 31日 印刷

1990年 4月 9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국통연 90-3-23)

